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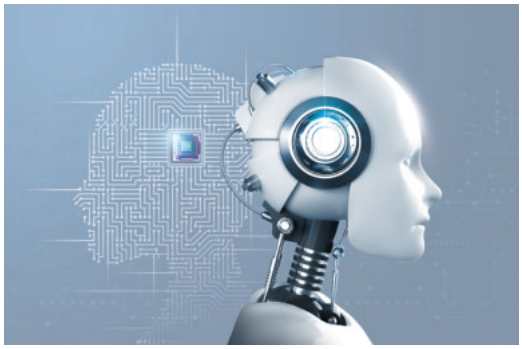
4 2021
Vol. 52

Specialty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CONTENTS

April. 2021
VOL. 52



04 재정 INSIGHT

04 **KPFIS 인사이트**
· 재정정책 분야의 인공지능 윤리를 생각한다
장윤정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12 **재정칼럼**
· 인공지능과 재정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재정정책 분야 인공지능 활용방안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273-05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 02-6908-8593

제작
㈜케이에스센세이션 | 02-761-0031

20

재정 NOW

20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26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추가경정예산

32 **키워드 재정**
백신

36 **해외재정동향**
OECD 중간 경제전망

42 **Data for All**
데이터 과학자

44

재정 STORY

44 **이달의 재정 이야기**
행정법의 공통 매뉴얼「행정기본법」

48 **정부재정통계변천사**
1950년대 원조재정: 자유경제체제와 재정안정

54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앤디 워홀과 그림의 대량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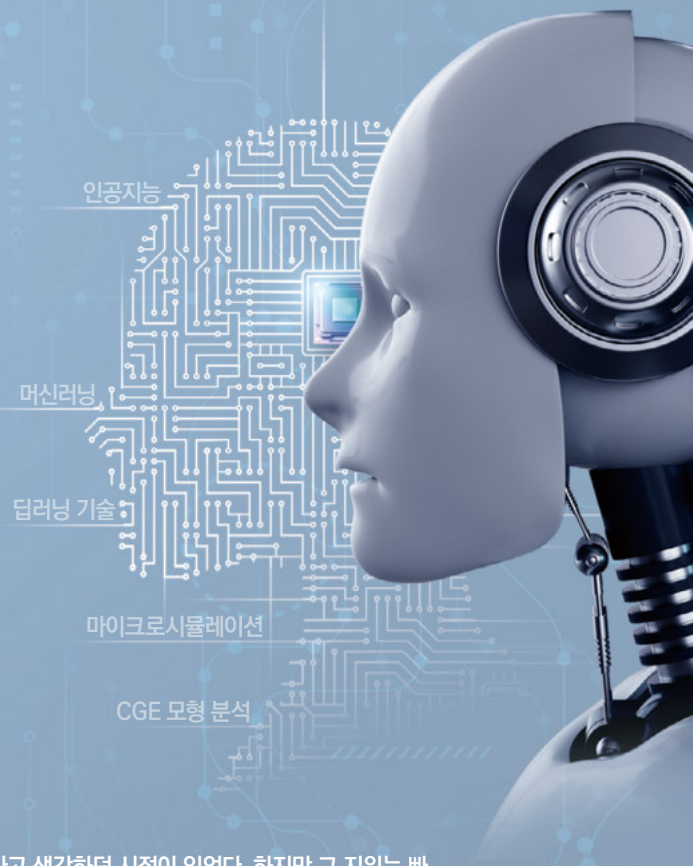
58 **경제철학 이야기**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선도한
루드비히 폰 미제스

62 **재정 캘린더**

64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67 **애독자 코너**

재정정책 분야의 인공지능 윤리를 생각한다



경제발전에 있어 인간의 노동력만큼 중요한 투입요소는 없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그 지위는 빠르게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흐름은 이미 불가역적이어서, 만약 'AI 없이 생활해보기(AI-Free)'를 시도한다면 플라스틱 없이 생활하기(Plastic Free)만큼 어려운 미션일 것이다. 영상판독, 판례분석, 주식투자, 부동산 권리분석, 회계, 게임, 바둑, 골프 등에서 인공지능은 이미 사람을 따라잡았다. 얼마 전 전투기 부조종사로 데뷔한 미공군 소속 알투뮤(ARTUμ)처럼 한 분야에 전문화한 인공지능도 있고, 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의 규칙을 스스로 깨우쳐서 이것저것 두루 잘하는 범용 인공지능 뮤제로(MU Zero)도 태어났다. 오늘도 인공지능은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발전 중이다.

이처럼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가 빠르게 실현되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 중립성, 윤리 등의 현안도 부상 중이다. 지난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인공지능의 개발과 적용이 준수해야 할 '국가 인공지능 윤리규정'을 마련하는 등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만약 인공지능이 재정정책 분야에 투입된다면 어떨까? 현재의 속도라면 사실 몇 년 이내에 벌어질 일이다. 그럴 경우 후생경제학 이론에서만 존재했던 '선의의 사회계획가'(Benevolent Social Planner)[1]를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재정관리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교육이 필요할까? 재정 분야의 AI 기술 개발과 적용은 어떠한 윤리적 문제와 마주치게 될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과거의 경험이나 해외 사례로부터 참고할만한 것이 많지 않다. 오직 상상하고,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장윤정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yjchang@kpfis.or.kr)

1 사회 또는 경제 주체들의 후생(만족도) 총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 소비, 노동의 균형 배분 상태를 찾아내는 가상의 주체이다.

1. AI와 정책: AI란 무엇이고 어디까지 왔는가

인공지능(AI)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컴퓨터가 인간 지능을 모방하여 구현하는 지각, 추론, 학습능력 기술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 프로그램 및 IT 솔루션 개발 회사인 SAS는 인공지능을, '기계가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새로운 입력 내용에 따라 기존 지식을 조정하며,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보통 두 단계로 설명된다. 현재까지 존재하고, 구현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은 약(弱) 인공지능이다. 미리 사람이 입력한 데이터와 지정한 논리를 학습하여 답을 찾아내는 머신러닝 기술과, 지정한 논리가 없더라도 입력된 데이터와 정답 간의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딥러닝 기술로 약 인공지능이 구현된다. 한 분야에 특화되어 개발됐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신속도와 정확성 측면에서 인간을 능가할 수 있다. 인간과의 대국에서 승리한 알파고도 바둑 분야에 특화된 약 인공지능에 속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래에는 강(强) 인공지능도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러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들이 서로 연계되고 학습 속도를 높이면 인공지능의 '지능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 인공지능이 초지능이나 인공의식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과 달리 망각하거나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때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위에 놓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또 앞서 언급한 약 인공지능이라 해도, 소수의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정책 대상으로서의 AI, 재정정책 도구로서의 AI

그럼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향후 강력한 경제성장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통해 국가전략 산업으로 선도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책으로도 추진되고 있다. 바로 재정정책의 대상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실제로 2021년 예산 중 약 2.3조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AI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한편 재정정책의 도구로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공공서비스부터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부문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고 국가 경제 확산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정부 부문의 다양한 기능에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넓혀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재정정책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계된 논의라 할 수 있겠다. 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수행한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모두 107개로 집계하고 있다[2]. 이에 따르면, 인공지능 관련 사업의 활용 분야는 2018년에는 주로 챗봇 등

2 행정안전부 연구용역(2020.12.), '공공분야 인공지능 촉진 및 활성화 방안'

민원 상담, 업무 자동화에 집중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3년 뒤인 2020년에는 예측, 예방 서비스로 그 중심이 옮겨가는 추세이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보자.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징후를 AI를 통해 탐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고용노동부도 실업급여 지원금의 부정수급과 중복수급을 적발하는 방법에 머신러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3]. 국세청에서는 탈세 적발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에 인공지능을 일부 활용한 사례가 있다[4]. 또한, 국세청에서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금액을 미리 찾아내 기입해 주는 '모두채움신고서' 서비스도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재정사업과 관련한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가 주로 대국민 서비스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즉, 정책 사이클 중 기존에 결정된 정책의 집행과 점검에 집중된 것이다. 그러나 챗봇에서 예측 서비스로 이동하듯이, 점차 영역을 넓혀 머지않은 미래에 정책 결정을 돕기 위한 여러 분석에도 활용될지 모른다. 실제 알리바바그룹 마윈 회장의 언급으로 주목받은 중국의 '디지털 레닌주의' 실험은, 인공지능을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결합시킨 정책결정 모델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드론, 빅데이터, 사물통신(IoT)을 묶어 실시간 분석하면 모든 자원을 시장경제 이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경제의 최대 단점인 계획오류와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인공지능을 통한 전국 농작물 작황 및 수요 파악 대신 안면인식 기술로 전체 국민을 실시간 감시 중이라는 비판이 따라다닌다.

재정정책 대상이나 도구로써의 인공지능 이외에, 인공지능 기술이 초래할 일자리 감소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문제도 곧 현실화 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이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지 혹은 그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지는 산업혁명 이래 늘 논쟁거리였다. 신기술에 밀려나는 것은 당대의 근로자이고, 그 기술에 가져온 일자리의 혜택을 입는 것은 후대의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관론자들의 예측대로 "이번에는 다르다"면, 즉 인간의 근력을 대체하는 기존 산업혁명과 다르게 이번에는 인간 자체를 대체하는 산업혁명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대체되어 소득을 잃게 되는 근로자를 빈곤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든, 그 재정 충당을 위해 새로운 종류의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일이든 모두 인공지능과 연관돼 진행될 재정담론이 틀림없다.

정책분석 분야의 AI 활용 가능성

재정학의 근간이 되는 후생경제학에는 '선의의 사회계획가(Benevolent Social Planner)'라는 가상의 존재가 등장한다. 선의의 사회계획가가 한 경제 내의 구성원 모두의 만족(후생)을 극대화해 주는 균형 생산량을 찾아냈더니, 완전 경쟁시장의 조건하에서 각 개인이나 기업이 자기만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추구할 때 도달하는 균형점과 동일하더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도 아니고, 외부성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렇

3 고용노동부 연구용역(2018), '머신러닝을 활용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분류시스템 구축방안'

4 중앙일보 기사(2020.10.19.), '세금 미꾸라지들 추적해 1.5조 물린 국세청 AI'

기 때문에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의의 사회계획가를 대리하여 그 불완전함을 보완하고자 하는 정부의 재정 개입이 정당화된다고 후생경제학은 설명한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에서부터 출발하여 발달한 오늘날의 경제·재정정책 분석모형, 즉 비용편익분석, 마이크로시뮬레이션, CGE[5] 모형 분석 등에도 AI 기술이 근시일 내 접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이론적인 검증을 거쳐 최적으로 판단된 모형에 분석대상에 대한 실제 변수를 입력하고, 반복적인 작업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분석 원리를 가지고 있다. 알고리즘과 머신러닝을 활용하면 이러한 모형을 활용한 반복적 작업을 수월하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분석작업의 질과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분석작업을 보다 기계화할 때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경제학적인 기본 전제이다. 예를 들어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분석이라면,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후생이 동질적이며, 계량화 가능한 것으로 전제하게 된다. 그런데 이에 더해 현재의 사회 구성원만을 고려할지, 미래 세대까지 고려할지, 환경적 요인도 고려한 사회적 비용과 후생을 설정할지 등은 분석의 목적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된다.

분석의 목적과 기본 전제가 내포하는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이뤄진 분석의 총합을 데이터로 기계학습을 한 뒤에 새로운 사안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면, 산출된 결과는 형평성이나 환경보전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편향된 값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

5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은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분석하는 경제모형으로, 정책, 기술 등 각종 요인의 변화에 대해 경제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추정하는 경제모형의 한 종류이다.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적정 국가부채 수준을 산출해 내고, 분야별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제안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때 어떠한 목적과 관점을 위한 최적화의 결과를 지향할지는 아직까지 분석 주체가 정의할 수 있는 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학습 데이터 입력과 분석, 예측 모형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2. AI와 윤리

OECD AI 윤리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기술의 오남용·데이터 편향·알고리즘에 의한 차별·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공지능의 윤리 이슈가 새롭게 대두됐다. OECD와 EU 등은 인공지능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원칙들을 발표하는 중이다[6]. 그 성과의 하나인 OECD 'AI 윤리 가이드라인'은 2019년 6월 발표되어 42개국이 받아들였는데, 다음의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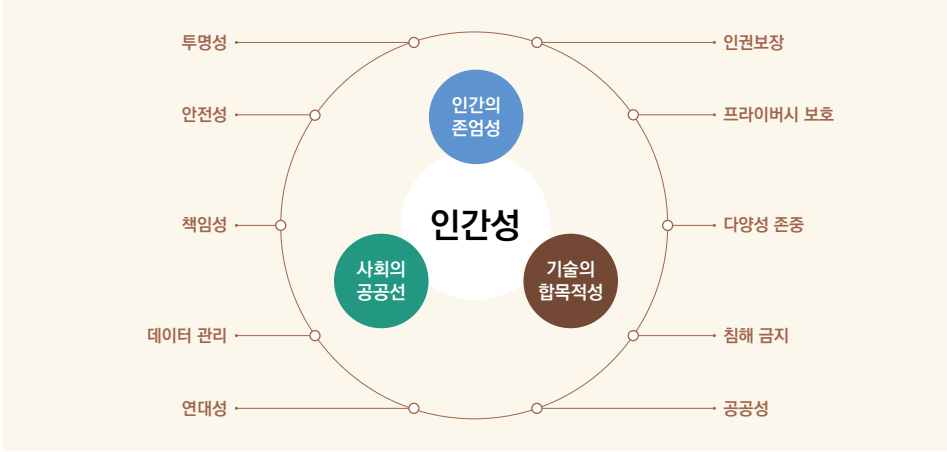
1. AI는 인간을 이롭게 하고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웰빙을 추구해야 한다.
2. 법과 인권, 민주적인 가치와 다양성, 공정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3. 안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해야 하며,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한다.
4. 투명성, 공개성을 통해 AI에 기반한 결과에 인간이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5. AI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관과 개인은 위 원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OECD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2020년 12월 마련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범용성이 있는 일반 원칙'으로써 마련되어, '사안별 또는 분야별 인공지능 윤리기준 제정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제안됐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재정정책 분야의 인공지능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인공지능 윤리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0.12.22.),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 마련'

〈그림〉 **인공지능 윤리기준 구조**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3대 기본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이다. 10대 핵심요건은 인공지능의 개발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의 요건이다.

이들 중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3대 기본원칙 중 사회의 공공선 원칙과 10대 핵심 요건 중 인권보장, 침해금지, 연대성이 있다.

3. AI와 재정정책의 윤리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과 관련한 재정 분야의 문제

먼저 3대 원칙 중 사회의 공공선 원칙은 '인공지능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과,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이 인류의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른 분야보다 특히 재정정책 결정을 위한 분석작업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자 할 때 이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까다로워질 수 있는데, 취약계층이나, 보편적 복지가 재정운영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을 판단함에 있어, 가구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자산수준까지 고려할 것인가? '보편적 복지'의 측정지표는 가처분소득이 되어야 할까, 소비수준이 합당할까? 이와 같은 실질적 문제는 우리 사회와 경제가 지향하는 분배 상태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도 맞닿아 있다.

다음으로 10대 원칙 중 인권보장 요건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은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중 인간의 권리가 '인권'을 의미한다면, 재정정책과 결부된 개인 경제활동에서의 인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례로, 중국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을 국가 행정에 활용하여 범죄자 검거뿐 아니라 체납세금 징

수에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체납자 적발에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도 괜찮은 것일까? 재정정책 추진이라는 목적 추구를 위해 타협할 수 있는 인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덧붙여 연대성 요건은 '다양한 집단 간의 관계 연대성을 유지하고, 미래세대를 충분히 배려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따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제 분석 모형 구축 시에 가급적 미래세대에 대한 영향분석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정책 분석 시에 선택적으로만 미래세대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이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면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침해금지 요건은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과 부정적 결과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책결정을 위한 분석을 수행할 때, 인공지능이 내놓은 분석 결과를 무턱대고 신뢰하기보다는 그 분석 결과의 적용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과 부정적 결과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 분야 인공지능 윤리규정을 생각한다

재정 분야 인공지능 윤리규정 수립을 논의하는 단계에서는,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국가 인공지능 윤리규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적용대상은 재정정책과 연관될 수 있는 사업수행관계자들을 포괄하여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경제부처와 유관 기관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AI 기술을 적용한 연구·개발 사업 및 시스템 개발, 유지, 운영에 참가하는 모든 주체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다루는 데이터의 질과 내용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 투입되는 데이터가

정확하고 편향 없는 데이터가 되도록 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특히 분석대상 재정정책이나 사업의 주 수혜계층에 대해 다방면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시계열 데이터 생성, 행정데이터 교차 이용과 관계된 품질기준 수립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정보원은 예·결산 관련, 그리고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한 데이터, 확장성 높고 활용도 높은 데이터가 투입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데이터를 정제하고 축적하는 역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분석모형의 설계에 있어서, IT 기술 전문가와 전통적 정책 분석 전문가가 역할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경제효과 분석 시에 사용되는 모델의 세부적인 가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알고리즘의 세부사항 결정에 참여해야, 분석모형이나 목적변수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조정 및 고려한 분석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4. 맺음말

본고는 오늘날의 인공지능 기술이 한편으로는 주된 재정투자 대상으로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국민 서비스 영역에 주로 활용되는 정책 수단으로서 재정정책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지켜야 할 윤리로 우리나라에서 지난 12월 발표된 국가 인공지능 윤리규정을 알아보고, 여기에 재정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개념들 -취약계층, 보편적 복지, 미래세대 등- 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향후 인공지능의 적용범위가 재정정책 결정을 위한 분석까지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러한 개념들이 재정 분야의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구현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덧붙여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 제공되는 데이터는 정확하고 편향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기존 분석 결과에 전제된 가정과 사회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모형 설계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으로 재정정책의 주체인 경제부처와 유관 기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범위를 보다 많은 영역에서 탐구, 시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모여 또다시 미래의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결과가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재정관리로 수렴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인간과 윤리를 중심에 두는 접근, 또한 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인공지능과 재정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genoswoo@gmail.com)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디지털 기반의 경제혁신안이 제안되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면 과거의 산업혁명들이 그랬듯이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뉴딜 사업 중 빅데이터와 더불어 대표적인 부문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이다. 인공지능은 무서운 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다양한 부문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장이 그렇듯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통해 AI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인력 육성이다. 수익성이 담보된다면 각 개인이 인공지능 관련 인적자본에 투자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인력 육성이 가능하다. 혹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스스로 인재를 길러낼 수도 있다. 하지만, 개별 기업이 육성하는 인재들은 다른 회사로 유출될 수 있어 기업들이 충분히 훈련을 시킬 유인이 부족하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속도를 고려해보면 충분한 숫자의 인재를 양성하기도 어렵다. 이런 경우 정부가 재정을 통해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이나 대학원, 혹은 고등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훈련기관이 필요하다. 팬데믹 상황과 근무여건을 고려하면 오프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도록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기금을 통해서 제공하는 교육훈련의 질은 생각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대학이나 대학원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펴는 것이다. AI 산업뿐만 아니라 ICT, 반도체, 제조, 의료, 자동차, 교육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산업에 다양하게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게끔 모태펀드를 위한 투자, 정책금융을 통한 융자 및 이차보전, R&D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하게 지원해야 한다.

열린재정이 제공하고 있는 2021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 관련 사업에 얼마나 많은 재정을 쓰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프로그램으로 보면 9개 프로그램이 인공지능 관련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융합산업,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인터넷융합산업, 보건산업육성, 신산업진흥, 주력산업진흥 등의 프로그램이 인공지능 관련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단위사업으로는 AI 기술 개발, 바이오·의료 기술 개발, 보건의료 연구 개발, 스마트전자 기술 개발 등이 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국회확정예산 규모는 약 1,720억원 정도이다. 물론 다른 내역사업에도 인공지능 관련 재정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위 숫자는 인공지능 재정사업의 최소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담당 부처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에 걸쳐 있다.

한편, 재정사업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예산편성, 기금에 대한 평가나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조금 더 체계적, 과학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예산편성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부처 간 혹은 기금 간 사업의 중복성을 평가하는 일이다. 현재는 경력이 있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이나 국회의 예산정책처 혹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사업의 효과성이나 중복성을 검토한다. 사업계획서

검토와 관련하여 인적자본이 축적된 인원은 수많은 사업 중 유사, 중복 사례를 어느 정도 걸러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순환 보직으로 새로 자리에 임명된 인원들은 아무래도 경험자보다 잘할 수가 없다. 경험자들도 업무 당일의 몸 상태에 따라서 업무 성과를 담보하기는 어렵다.

인공지능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분류이다. 유사한 사업들을 특성(Features)에 기초하여 분류할 수 있다. 즉,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유사한 사람들끼리 분류하는 작업을 기계학습이나 심화학습을 통해서 익히고 학습에 기초하여 분류할 수 있다. 결정은 예산담당자들이 내리겠지만, 사업의 유사성 판단에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나 기금 평가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이 가능하다. 개별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언론이나 인터넷 게시판, SNS 등을 통해 표출된다. 현재는 개별 평가위원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개별 사업에 대한 평판을 판단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인터넷 웹 크롤링을 하고, 부정 혹은 긍정적 평가를 수집하고, 이를 지수화하여 평가위원에게 제공을 할 수 있다.

향후 인공지능 관련 재정지출의 분야와 규모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국가보조금, 연금 등의 지급에 있어 블록체인 기반 시범 사업 등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의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정부 구축에도 많은 기대가 된다.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재정정책 분야 인공지능 활용방안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klee@khu.ac.kr)

2021년 2월, K-정책 플랫폼(이하, K-POL)은 '대한민국 100년을 향한 정책 플랫폼&어젠다'를 발표했는데, 통상, 복지, 교육, 혁신 정책과 더불어 재정정책을 5대 중점 분야 중 하나로 다뤘다. 재정의 지속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5대 어젠다 중의 하나로 제시했는데, 복지혜택-국민부담-국가채무를 적절히 조합하고, 복지지출 증가를 연 0.5%p로 적정화함으로써 한국형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2030년 60%, 2060년 100% 이하의 감내 가능한 국가채무를 유지하며, 국민부담 연 0.4%p 증가라는 완만하고 지속적 증세정책을 제시했다.

기준선(Baseline) 전망에 따르면 현행 복지제도가 유지되더라도 향후 40년간 연 0.42%p씩 복지지출이 증가되는 것인데, 이는 과거 50년간 복지지출의 증가 속도 연 0.22%p보다 2배 이상 빠른 수준이다. 파격적으로 현 수준보다도 높은 복지지출 증가 속도를 연 0.5%p로 유지하자는 주장이다.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를 재편하는 동시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한 부분의 보장 수준은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 이외 분야 재정지출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으로 경상성장률 수준 이하로 억제하면 국민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 국가재정을 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18년 기준,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 국제비교를 하면 한국은 복지지출이 11.6%인 반면 OECD 평균은 21.8%이므로 복지지출 증가속도를 연 0.5%p로 높이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K-POL은 우리나라가 OECD보다 국가채무 비율을 작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네 가지 제시했다. ①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로 국내·외 충격이 많은 편이고, 원화가 국제화되지 않아 대규모 경제나 기축통화 국가에 비해 국가채무가 더 작아야 한다. ②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선진국보다 커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위해 국가채무 규모는 더 작아야 한다. ③ 고령인구 비중이 낮아(한국 14% vs OECD 평균 17%) 향후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 부담을 감안하면 국가채무를 가능한 한 작게 유지해야 한다. ④ 남북통일 과정에서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이 예상되므로 국가채무 규모를 가능한 한 작게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부담을 완만하게 인상한다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안정화에 필요한 수준을 감안해 인상하는 것으로, 국제적 조세정책의 큰 흐름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에 따라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도록 보다 넓은 대상에 대해 완만하지만 지속적 증세를 추진하자는 것이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세수가 지나치게 작은 소득세, 소비세, 자산보유세 부담은 늘려나가되 법인세, 상속증여세, 자산거래세 부담은 다소 줄여나가자는 제안이다.

필자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정책 제안에 대해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제안은 집행되기 이전에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이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정책에서 상정하고 있는 각종 전제와 가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주장들도 있을 것이며, 이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제시된 정책 대안의 효과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주장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한 다른 대안, 다른 효과를 내기 위한 다른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이러한 정책 제안을 어떻게 지원하고 검증할 것인가?

먼저 이러한 정책 제안을 지원하는 방법은 국민 여론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국가채무에 대한 여론조사(㈜데이터리서치에서 실시한 DRC 정기 국민여론조사, 2021.1.25.)에서 대다수 국민과 경제전문가들은 국가채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했다. 부채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76.9%에 달했으며, 이 중 가계부채를 가장 우려(48%)하고 있고, 정부부채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35.6%)이었다. 한국경제학회에서 실시한 경제전문가 설문조사(2020.9.28.~10.4.)에서는 국가채무가 크지 않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가 75%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론조사는 특정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으며, 조사의 결과가 다소 취사선택되어 자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최근의 상황은 AI와 미디어를 활용한 국민인식 파악이 가능하며 또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높이고 있다. 지금은 여론이 소셜미디어와 댓글들로 표현되어 정책수요자/결정자에 영향을 미치며, 데이터로 축적, 분석 가능해져 AI/빅데이터 활용 분석 능력이 정책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국민청원,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의 콘텐츠 기사화 등 다양한 의제 설정 채널이 등장하고 있고, 세대 간 미디어 사용의 분절로 인식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정보 편식, 쏠림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카톡방, 텔레그램방 등을 활용한 폐쇄적 정보 공유로 탈진실의 증폭이 이루어지면서, 정치 성향의 양극화, 정책의 비합리성, 포퓰리즘의 위험이 커져 합리적인 정책합의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 의제 설정, 결정, 집행, 평가 등 정책의 전 과정에서 AI 분석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 의견을 신속, 정확, 투명하게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과학적 방법론으로서의 AI 활용이 필요하다. 종전에는 정책 현안과 수요 발굴 및 정책 반응 탐지를 여론조사, 전문가에게만 의존했다면, 이제 비대면 미디어와 AI/빅데이터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 수요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수요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정책을 맞춤형으로 정확하게 설계하여, 정책 수요자에게 적합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인공지능 방법론은 정책 수요자의 선호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파악하고 정책 성공을 위해 맞춤형 정책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제안된 정책을 놓고 각 정당인, 정책가, 정책연구자들이 토론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진영논리와 인적 네트워크에 묶여서 객관적인 토론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공지능 토론기계를 도입할 수 있다. 이 인공지능 토론기계는 인간관계와 진영논리로부터 자유롭다. 따라서, 인간 정책가들과 인공지능 토론기계를 혼합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

다. 이미 IBM은 2019년에 세계토론선수권대회 우승자와 토론 대결을 펼치기도 했다(토론 주제는 '유치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좋은가?'였다). IBM의 토론기계 Project Debater는 인간 우승자와의 대결에서 패배했고 토론 과정에서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생성해 실망시키기도 했지만, 정책 가설과 근거를 제시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0년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OpenAI의 GPT-3도 정책토론에 활용할 수 있다. GPT-3은 N개의 단어를 입력하면 N+1번째에 나올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출력하고,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문장을 생성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복지지출 증가를 연 0.5%p로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라고 GPT-3에게 질문하면, GPT-3은 나름의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물론 2021년 현재 GPT-3은 이러한 종류의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변할 능력이 안 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복지지출 증가를 연 0.5%p로 증가시키는 것과 연 5%p로 증가시키는 것 중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질문할 경우 GPT-3은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IBM의 Project Debater처럼 토론을 구조화하고 구조화된 틀 안에서 주장이 가진 전제와 그 논리적 귀결을 검증하는 방법론에 더 유망하다. 그러나 나날이 발전하는 인공지능 방법론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정책 토론기계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는 인간 정책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정책가들의 지능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기여한다. 앞으로 정책의 토론은 서로의 신분을 알 수 없는 메타버스(Metaverse) 환경에서 아바타들끼리 할 수 있으며, 각 아바타는 순수한 인공지능 토론기계일 수도, 완전히 순수한 인간일 수도, 또는 강력한 인공지능 토론기계를 활용하는 인간일 수도, 여러 인공지능 토론기계와 여러 인간이 협력하는 집단지성 토론시스템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 아바타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국민과 시민을 위한 정책은 더욱 정교해지고 발전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대통령 후보는 TV토론에서 "나의 아바타가 토론을 해도 됩니까?"라고 질문할지도 모른다.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21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지은초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anncho@kpfis.or.kr)

2021년 2월 말 기준

총수입 97.1조원

2021년 예산
482.6조원

진도율
20.1%

97.1조원

총지출 109.8조원

2021년 예산
558.0조원

진도율
19.7%

109.8조원

통합재정수지

12.7조원 적자

(누적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수치

전월 대비
-16.1
조원

관리재정수지

22.3조원 적자

(누적 기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수치

전월 대비
-20.4
조원

국가채무

853.6조원

(누적 기준)

중앙정부
채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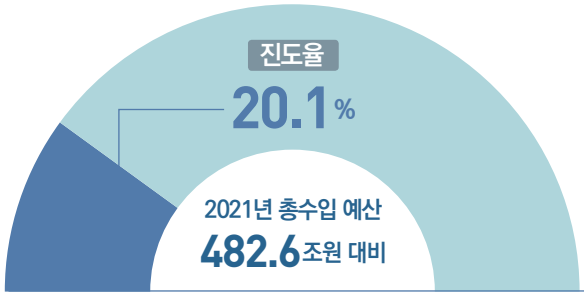
전월 대비
+17.7
조원

주: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1.4.

총 수 입

● 2021년 2월 말 기준

총수입
97.1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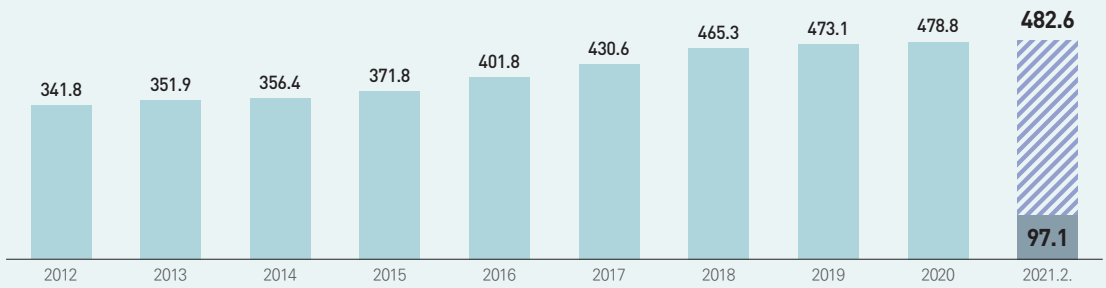


전월 대비
+39.8조원

전년 동기 대비
+19.4조원

주: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단위: 조원)



주: 2020년까지는 결산, 2021년은 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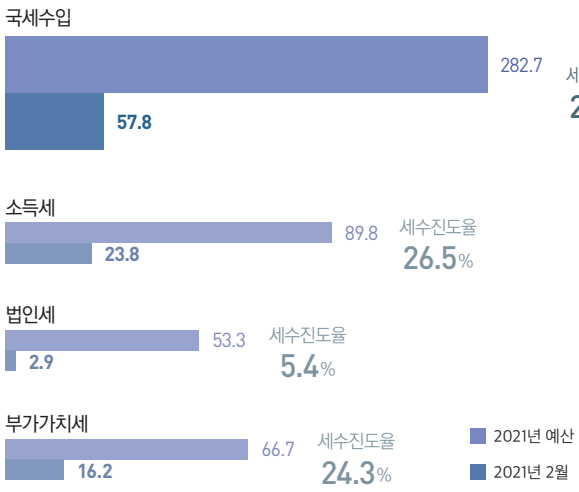
국세수입 57.8 조원
- 전월 대비 +19.0조원
- 전년 동기 대비 +11.0조원
- 세수진도율 20.4%

세외수입 8.2 조원
- 전월 대비 +6.5조원
- 전년 동기 대비 +1.4조원
- 세수진도율 28.2%

기금수입 31.2 조원
- 전월 대비 +14.4조원
- 전년 동기 대비 +6.9조원
- 세수진도율 18.2%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20.4조원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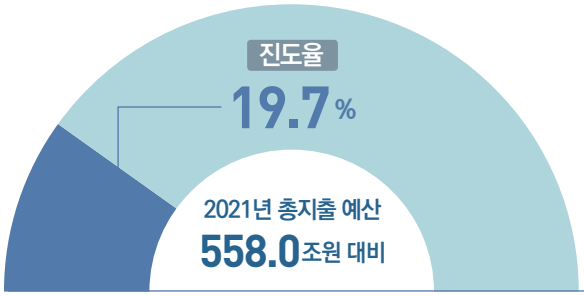


주: 세수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대비 당월 누계 세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총 지 출

• 2021년 2월 말 기준

총지출
109.8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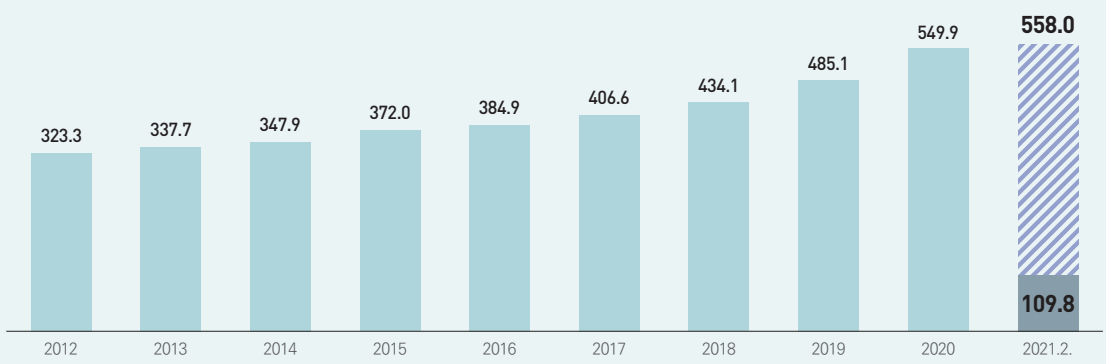


전월 대비
+56.0조원

전년 동기 대비
+5.8조원

주: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단위: 조원)



주: 2020년까지는 결산, 2021년은 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예산 80.8 조원 = **일반회계** 68.6 조원 + **특별회계** 12.1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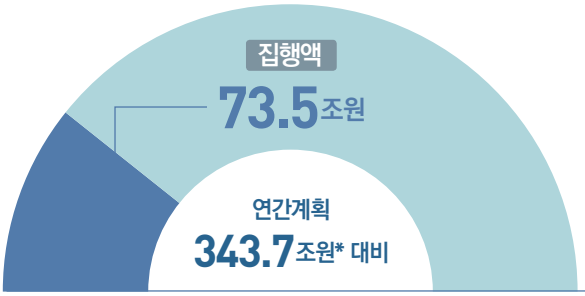
- 전월 대비 +42.2조원
- 전년 동기 대비 +0.5조원
- 진도율 21.5%

기금 29.1 조원

- 전월 대비 +13.8조원
- 전년 동기 대비 +5.3조원
- 진도율 15.9%
- 사회보장성 기금 지출 10.8조원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연간계획 대비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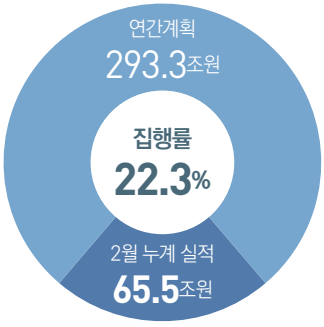


전월 집행액 대비
+39.7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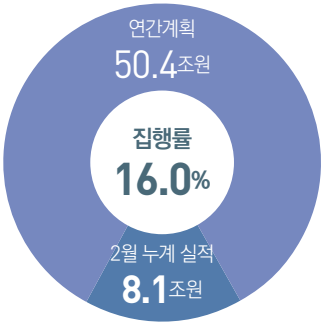
전월 연간계획 대비
+11.5%p

* 2020년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연간계획 수정(341.8조원→343.7조원)

중앙부처



공공기관



(단위: 조원, %)

집행률 상위 5개 부처
(누적 기준)

	부처명	2월 실적	집행률
1	중소벤처기업부	6.0	41.7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6	31.7
3	해양수산부	1.5	29.0
4	산림청	0.5	28.6
5	보건복지부	8.1	27.4

주 1)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47개 중앙행정기관과 39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2) 집행률은 해당 연도의 연간 계획 대비 당월 누계 실적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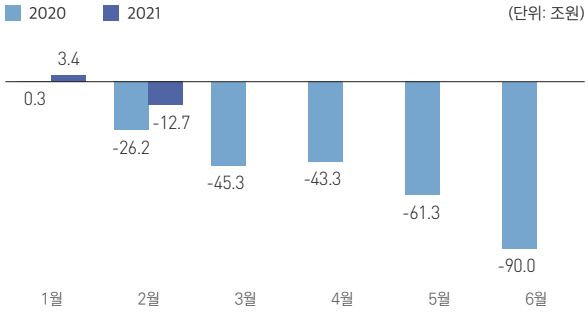
재정수지

• 2021년 2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
12.7조원
적자

전월 대비
-16.1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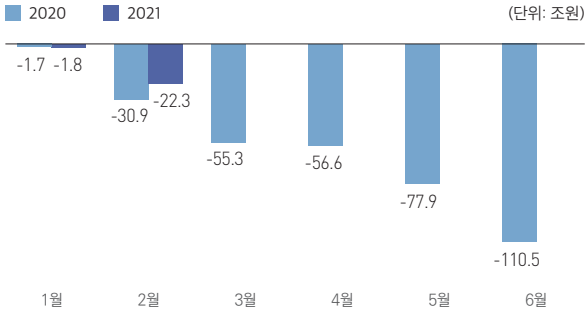
전년 동기 대비
+13.6조원



관리재정수지
22.3조원
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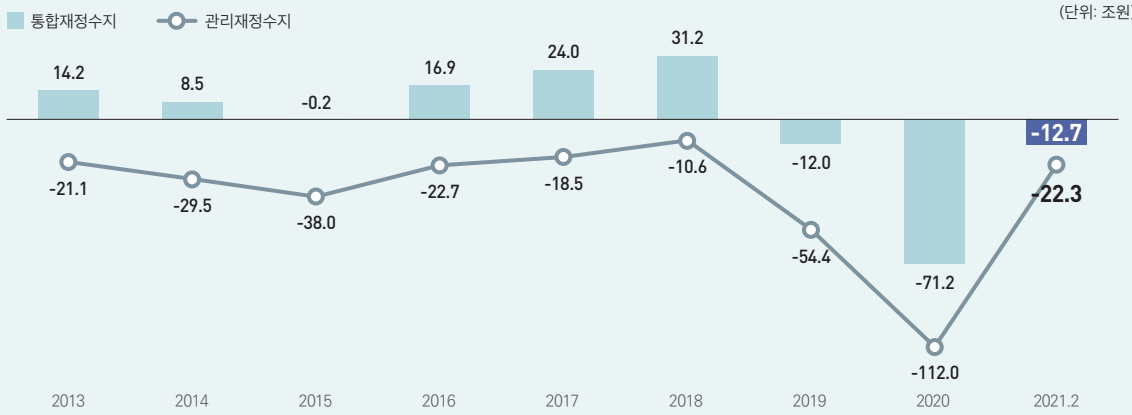
전월 대비
-20.4조원

전년 동기 대비
+8.7조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9.6조원
흑자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2020년까지 결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국 가 채 무

● 2021년 2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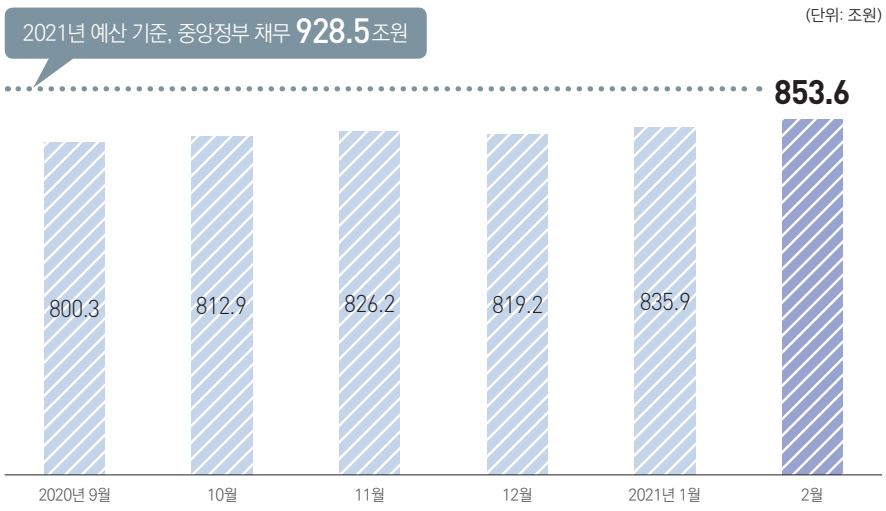
중앙정부 채무

8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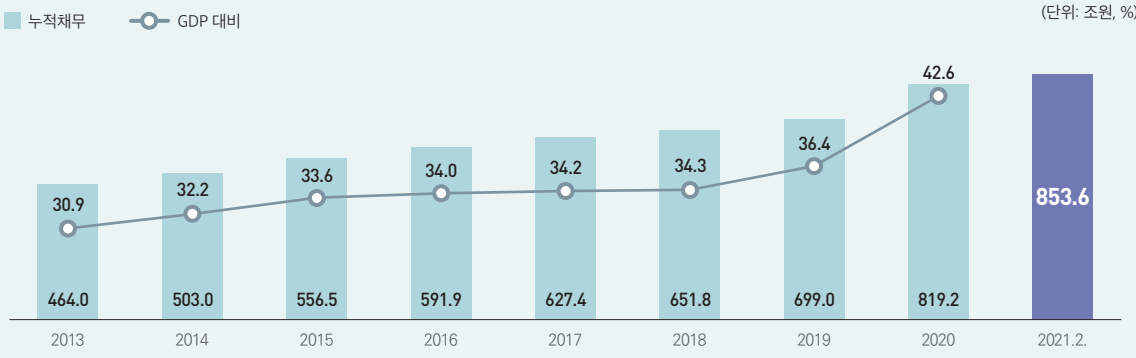
조원

전월 대비 +17.7조원

전년 대비 +34.4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3) 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 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국가재정통계 공식 플랫폼입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or.kr)

추가경정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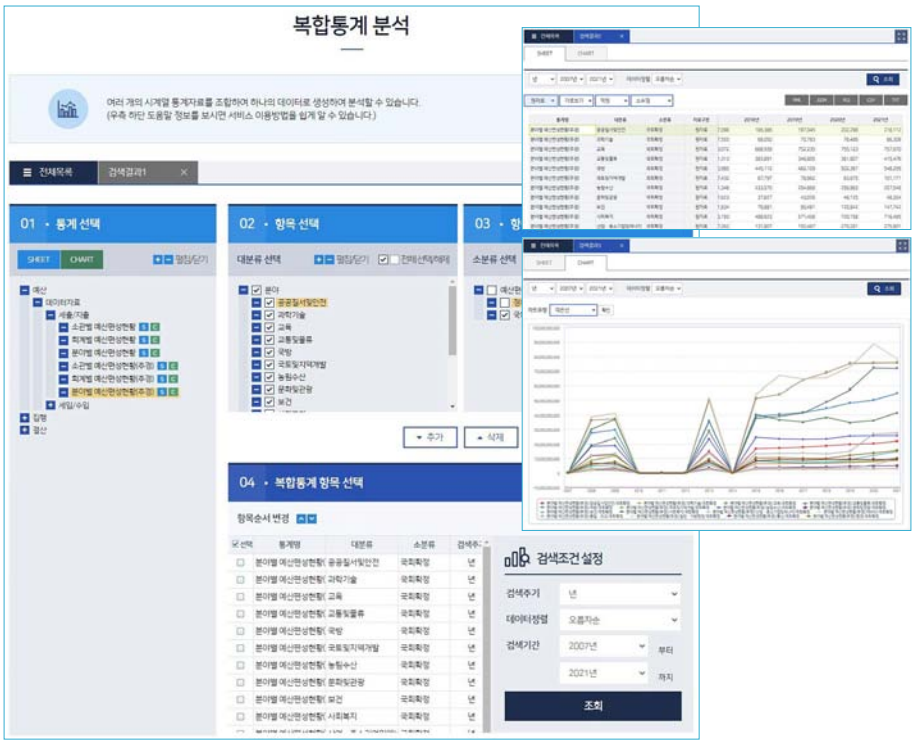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조치 연장과 피해 누적에 따른 추가 지원,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긴급 고용대책, 그리고 백신 구매·접종 등 방역소요 뒷받침 등을 목적으로 2021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줄여서 추경이란 국가의 예산이 확정된 뒤 수입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연도에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정보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추이

재정통계 > 복합통계 분석 > 예산 > 데이터자료 > 세출/지출 > 소관별 예산편성현황(추경) / 회계별 예산편성현황(추경) / 분야별 예산편성현황(추경)

'재정통계 〉 복합통계 분석'에서는 원하는 재정데이터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산 〉 데이터자료 〉 세출/지출 〉 소관별 예산편성현황(추경) / 회계별 예산편성현황(추경) /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추경)'**에서는 소관별, 회계별, 분야별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 자료들 중 원하는 자료의 추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 분야별 예산 편성현황 추이의 경우, **'01. 통계 선택'**에서 분야별 예산편성현황(추경)을 선택하고, **'02. 항목 선택'**의 대분류에서 조회를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고, **'03. 항목 선택'** 소분류에서 정부안 또는 국회확정 예산편성금액을 선택하여 복합통계 항목에 추가합니다. 데이터 항목 선택이 완료됐으면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후, 원하는 경우 **'04. 복합통계 항목 선택'**에서 항목 순서를 조정하거나 검색주기, 데이터정렬, 검색기간 등의 검색조건을 설정하여 조회하면 설정된 값들이 조회되는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한 상세 페이지에서 CHART 탭을 선택하면 해당 데이터를 바, 막대, 꺾은선 등 다양한 그래프 유형을 통해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데이터·문서자료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예산 > 문서자료 > 추가경정예산안 /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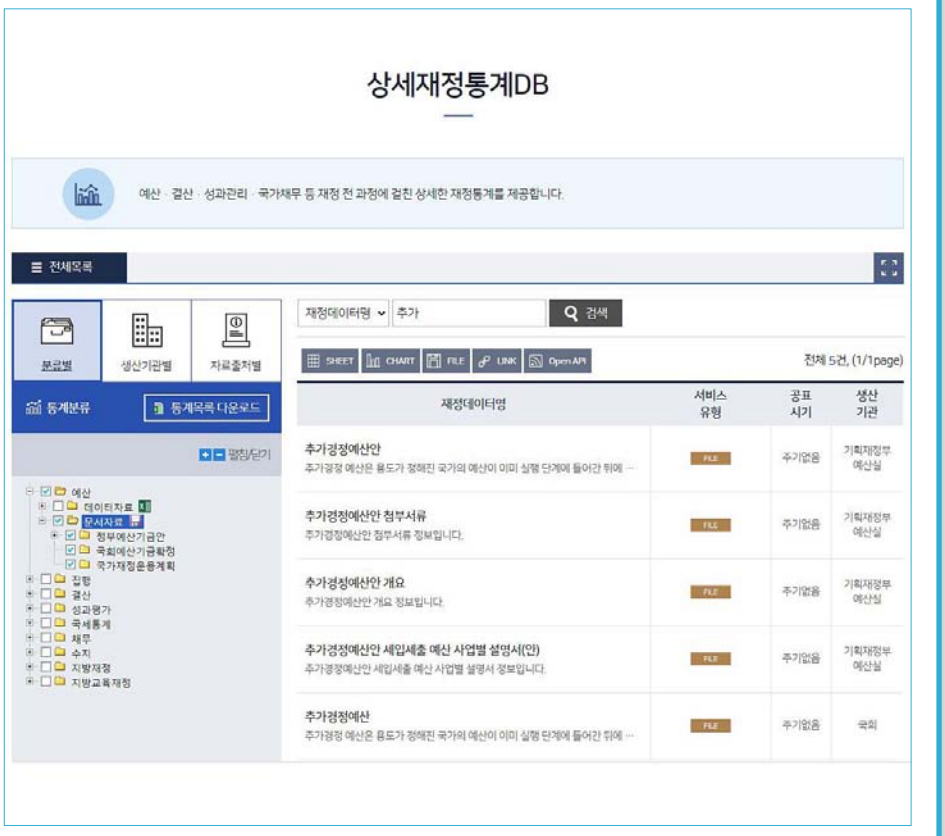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예산 > 문서자료 > 추가경정예산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예산 > 데이터자료 > 세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추경포함) / 세출 세목 예산편성현황(추경포함) / 세입 예산편성현황(추경포함)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성과평가 > 문서자료 > 성과계획서(안)(추경)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예산 〉 문서자료 〉 추가경정예산안 /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안)'에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개요, 첨부서류, 사업별 설명서 등 관련 서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951년부터 2021년까지 총 90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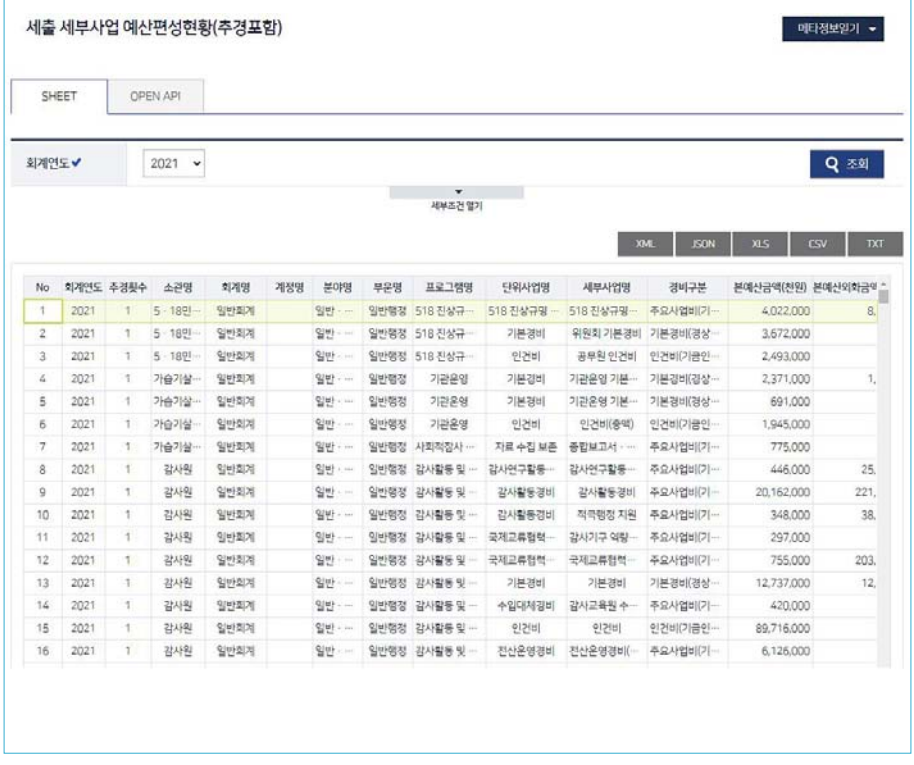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와 동일한 화면의 **'추가경정예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55년부터 2021년까지의 확정예산에 대한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예산 〉 데이터자료 〉 세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추경포함) / 세출 세목 예산편성현황(추경포함) / 세입 예산편성현황(추경포함)'에서는 해당 연도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세입·세출 데이터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추경포함)'**에서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 세부사업별 예산 규모를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의 △추경횟수 △소관명 △회계명 △계정명 △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경비구분 △본예산금액을 비롯한 △추경정부안금액 △추경국회확정금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세목 예산편성현황(추경포함)'**에서는 앞선 정보들과 함께 △목명 △세목명에 대한 정보도 함께 조회할 수 있으며, **'세입 예산편성현황(추경포함)'**에서는 해당 연도 세입의 △추경횟수 △소관명 △회계명 △계정명과 함께 △수입관명 △수입항명 △수입목명에 따른 △본예산금액 △추경정부안금액 △추경국회확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수정된 성과계획서에 대한 정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성과평가 〉 문서자료 〉 성과계획서(안)(추경)'**에서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258건의 각 소관별 추경성과계획서를 볼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3 기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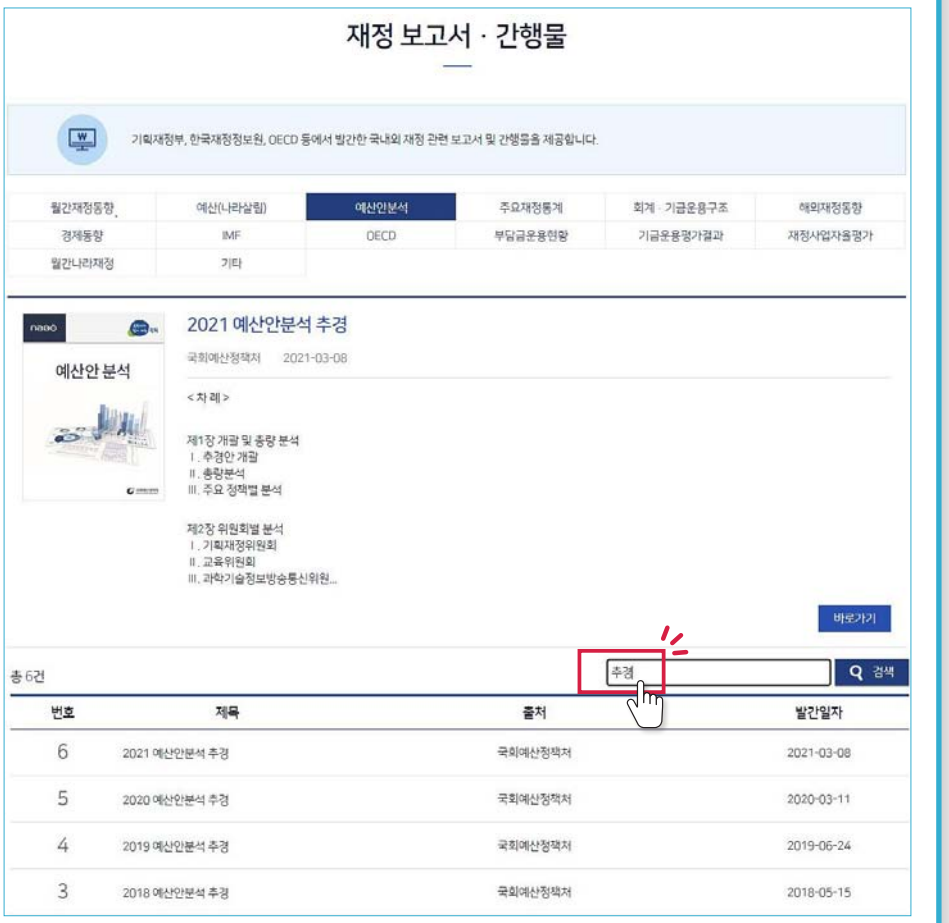
정부정책 →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 > '추가경정예산', '추경' 검색
분석보고서 → 재정자료실 > 재정 보고서·간행물 > 예산안분석 > '추경'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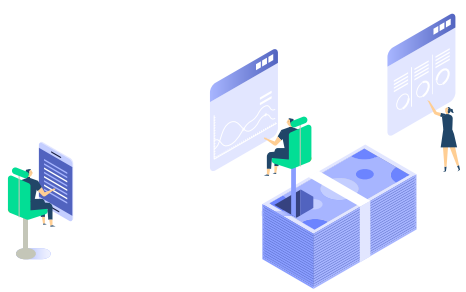
'재정자료실'에서는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최근 보도자료와 재정 보고서·간행물을 제공합니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한 재정당국의 최근 발표자료는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에서 **'추가경정예산'** 또는 **'추경'**으로 검색하면 총 144건의 정부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자료실 〉 재정 보고서·간행물 〉 예산안분석'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각 연도 예산안분석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추경'을 검색하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6건의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각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총량과 주요 정책별, 위원회별 분석 등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달의 이슈키워드

백신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백신'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접종 방법 △순서 △백신 종류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백신 도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도 관심을 키웠다. 연관 키워드로는 '백신접종', '코로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도출됐다. 이번 호 「나라재정」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등과 같은 감염병 예방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정부의 보건정책 관련 재정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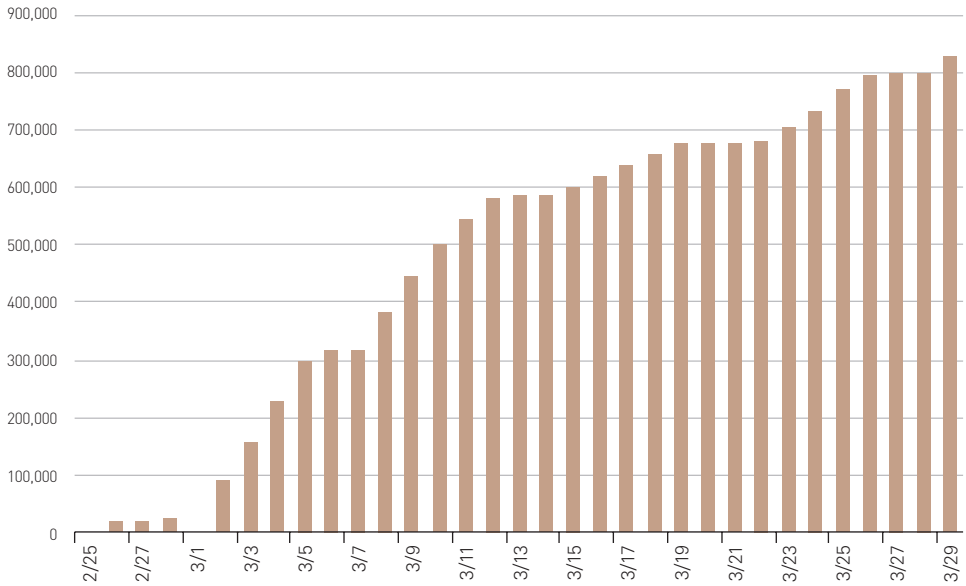
연관어: 백신접종, 코로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코로나백신, 병원, 대상, 바이러스, 예방접종, 방역, 요양병원, 효과, 예방, 주사기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big.pr.go.kr, 2021.3.15.), 수집기간: 2021.2.15.~3.15.

지난 2월 26일, 노원구 보건소에서 요양원 요양보호사가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며 국민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이날 1만 8,489명이 예방접종을 맞았으며, 3월 29일 기준, 총 82만 2,448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단위: 명)



자료: 질병관리청(2021), 「예방접종 현황」 재구성

정부는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했는데, △사망자 감소 △의료체계와 사회필수 기능 유지 △지역사회 전파와 집단감염 차단 등을 목표로 잡았다. 또한,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백신접종 순위를 정했다. 접종 순위는 백신 접종 목표에 맞춰 대상군[1]별로 실시한다. 1분기에는 130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인데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종사자(이상 가군),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및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1차 대응요원[2](이상 나군), 정신요양·재활시설 등 입소자, 종사자(이상 다군) 등이 접종 대상이다. 그 후, 2분기 900만 명, 3~4분기 3,325만 명을 접종한다.

1 대상군은 가(중증 및 사망 예방), 나(의료·방역, 사회 필수기능 유지), 다(지역전파 차단) 세 그룹으로 나뉜다.

2 역학조사, 구급대 등 코로나19에 1차적으로 대응하는 인원을 의미한다.

대상군별 접종 시작 시기

시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인원	130만 명	900만 명	3,325만 명	
가	•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종사자	•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 • 65세 이상 (고령자순 접종)	• 성인 만성질환자 • 성인 50~64세	• 2차 접종자, 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 (항체유지기간 고려)
나	• 코로나19 치료기관 종사자 •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 1차 대응요원 (역학조사·구급대 등)	•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1분기 접종 대상 외)	•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다	• 정신요양·재활시설 등 입소자·종사자	•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종사자	•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 성인 18~49세	

자료: 질병관리청(2021),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

백신 등 감염병 예방사업

2021년 감염병 예방 관련 사업 예산은 2020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등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해외백신 도입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감염병 예방 관련 예산

(단위: 억원)

관련 사업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추가경정예산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구축	38.6	458.5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48.3	199.2	-
감염병 예방관리	111.0	323.4	23,484.0

자료: 열린재정(2021),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재구성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구축

정부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의 추가 구축을 위해, 전년 대비 419.9억원이 증액된 458.5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권역 내 대규모 신종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환자를 격리 및 치료하여 감염 확산을 조기차단하는 전문 의료기관이다. 현재 조선대학교병원(호남권), 순천향대학교부속병원(중부권), 양산부산대학교병원(영남권) 등 3곳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올해 추가 구축되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코로나19 대응 경험 및 데이터를 바탕으로 권역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대규모 신종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권역별 병상공동대응, 환자전원·이송 등 권역 간 의료 협업을 지원하고, 권역 내 중증환자 집중치료, 시·도 간 환자 의뢰 및 회송 체계 등을 관리한다.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예산은 199.2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전년 대비 150.9억원 늘어났다. 이 사업은 신종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심리적방역을 위한 위기소통 전략의 수립과 시행을 목표로 한다. 특히, △감염병 전문콜센터 운영(62억원) △진단검사비(82억원) 등을 지원한다.

감염병 전문콜센터는 전화(1339) 및 온라인으로 감염병과 관련한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 신고 접수, 해외여행 입·출입국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방법, 외국인 감염병 민원 대응 등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는 역할도 맡는다.

진단검사비 지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등 보건소로 신고된 사람이다. 지원은 보건소와 검역소에서 이뤄지는 검사 및 진료만 해당한다.

●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12.4억원 증액한 323.4억원으로 편성됐다. 감염병 예방관리는 △감염병 확산의 차단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진단, 환자·접촉자 관리 등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억제하고 감염병의 발생을 감시·분석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 관리지침 개발, 방역 관련 전문가 교육·훈련, 감염병 관련 교육·홍보 등을 통해 국민이 감염병에 대해 자세히 알고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코로나19 해외백신 구매비용 2조 3,484억원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증액편성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확보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구매 계약을 확대해 7,900만 명분을 확보한 상태다. 종류별로는 코백스 퍼실리티 1,000만 명분,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화이자 1,300만 명분, 얀센 600만 명분, 모더나 2,000만 명분, 노바백스 2,000만 명분 등이다. 지난 2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활하고 안전한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OECD는 연간 2회(5월, 11월)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를 발간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대상으로는 추가적으로 연 2회(3월, 9월) 중간 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를 낸다. 일종의 수정 경제전망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3월 발표된 「OECD Interim Economic Assessment: Strengthening the Recovery: The Need for Speed」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우상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woosh@kpfis.or.kr)

OECD 중간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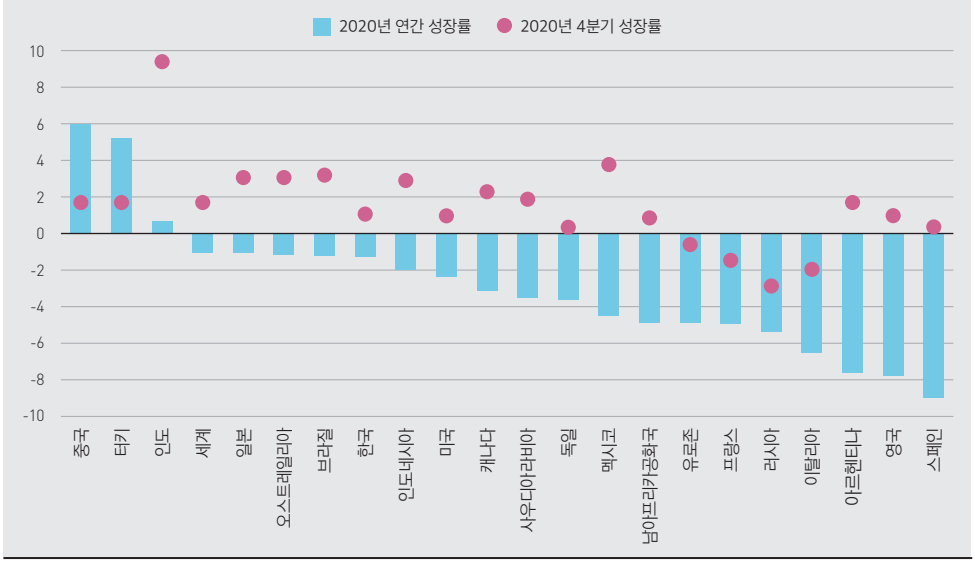
"2020년 -3.4%, 2021년 5.6%"

1. 최근 동향 세계 경제는 예상 대비 빠르게 회복

OECD는 최근 세계 경제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의 생산 및 보급 확대와 일부 국가의 추가 재정 지원 등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 중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볼 때,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봉쇄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 대비 -1% 수준까지 회복했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별 회복 속도는 차이를 보인다. 중국, 인도, 터키 등은 적극적 재정정책과 제조업·건설업 회복에 힘입어 팬데믹 직전 수준을 오히려 웃돌고 있다. 호주, 일본, 한국 등은 △효과적인 봉쇄조치 △정부 지원 △제조업 회복 등으로 팬데믹 이전에 비해 약간 밑도는 수준까지 회복했다. 미국은 대규모 경기부양책, 금융시장 여건 개선 등이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반면, 주요 유럽 국가는 바이러스 재확산, 봉쇄조치에 따른 서비스업 중심 근로시간 감소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부진하다. 이동성(Mobility) 측면에서는 신흥국이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1〉 **국가별 경제성장률**

(단위: %p)



자료: OECD(2021),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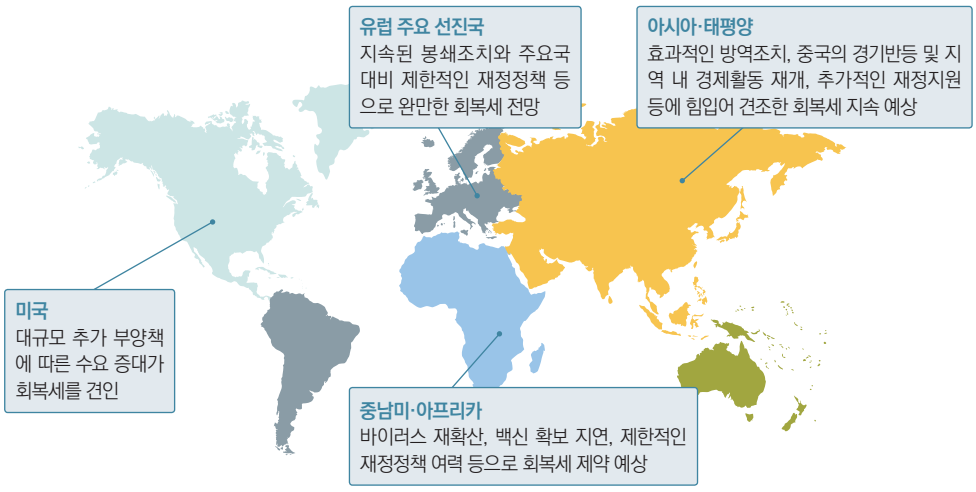
최근의 봉쇄조치와 이동제한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이전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봤다. △선별적인 방역조치 △소득지원 △근로환경 변화 등에 적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OECD는 △소비심리 회복 △노동시장 상황 개선 △저축 감소 등을 위해서는 백신의 빠른 보급과 접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지원 등 일자리 유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률이 하락하면서 음식·숙박·운송·도소매 등 서비스업과 취약계층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 회원국 전체로는 약 1,000만 명 이상이

실직 상태라는 것이다. 아울러 각국의 적극적 재정·통화정책이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1], 일본, 독일, 캐나다, 인도의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원책이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본 반면, 중국 등 일부 신흥국은 금년 중 재정정책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 2021년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5.6%, 한국 경제성장률 3.3%로 전망

OECD는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4% 역성장한 것으로 추정했다.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할 때보다 1.4%p 높여 5.6%를 내놓았다. 2022년은 0.3%p 상향 조정한 4.0%로 전망했다. 한국의 경우, 2021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2월 전망치(2.8%)에서 0.5%p 상향 조정한 3.3%를 제시했다[2]. OECD의 2021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그간 발표된 IMF(3.1%), 한국은행(3.0%), 정부(3.2%) 등의 전망치를 웃도는 것"이라며, "△최근 세계 경제의 회복세 △견조한 수출제조업 회복 흐름 △적극적 재정정책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 기준으로 분기별 GDP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회복 양상은 △국가 간 △선진국·신흥국 간 △지역 간 매우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미국은 대규모 추가부양책에 따른 수요 증대가 회복세를 견인하는 반면, 유럽은 2021년에도 여전한 봉쇄조치와 미흡한 재정정책으로 회복세가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국 반등에 따른 동반성장과 효과적인 보건·방역조치에 힘입어 견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중남미·아프리카는 백신 확보 지연과 부양 여력 소진 등으로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봤다. 특히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1월에 전망할 때보다 낮고, 이러한 현상은 신흥국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

	2020년	2021년		2022년	
		중간전망	조정폭	중간전망	조정폭
세계	-3.4	5.6	1.4	4.0	0.3
G20	-3.2	6.2	1.5	4.1	0.4
호주	-2.5	4.5	1.3	3.1	0.0
캐나다	-5.4	4.7	1.2	4.0	2.0
유로존	-6.8	3.9	0.3	3.8	0.5
독일	-5.3	3.0	0.2	3.7	0.4
프랑스	-8.2	5.9	-0.1	3.8	0.5
이탈리아	-8.9	4.1	-0.2	4.0	0.8
스페인	-11.0	5.7	0.7	4.8	0.8
일본	-4.8	2.7	0.4	1.8	0.3
한국	-1.0	3.3	0.5	3.1	-0.3
멕시코	-8.5	4.5	0.9	3.0	-0.4
터키	1.8	5.9	3.0	3.0	-0.2
영국	-9.9	5.1	0.9	4.7	0.6
미국	-3.5	6.5	3.3	4.0	0.5
아르헨티나	-10.5	4.6	0.9	2.1	-2.5
브라질	-4.4	3.7	1.1	2.7	0.5
중국	2.3	7.8	-0.2	4.9	0.0
인도	-7.4	12.6	4.7	5.4	0.6
인도네시아	-2.1	4.9	0.9	5.4	0.3
러시아	-3.6	2.7	-0.1	2.6	0.4
사우디아라비아	-4.0	2.6	-0.6	3.9	0.3
남아프리카공화국	-7.2	3.0	-0.1	2.0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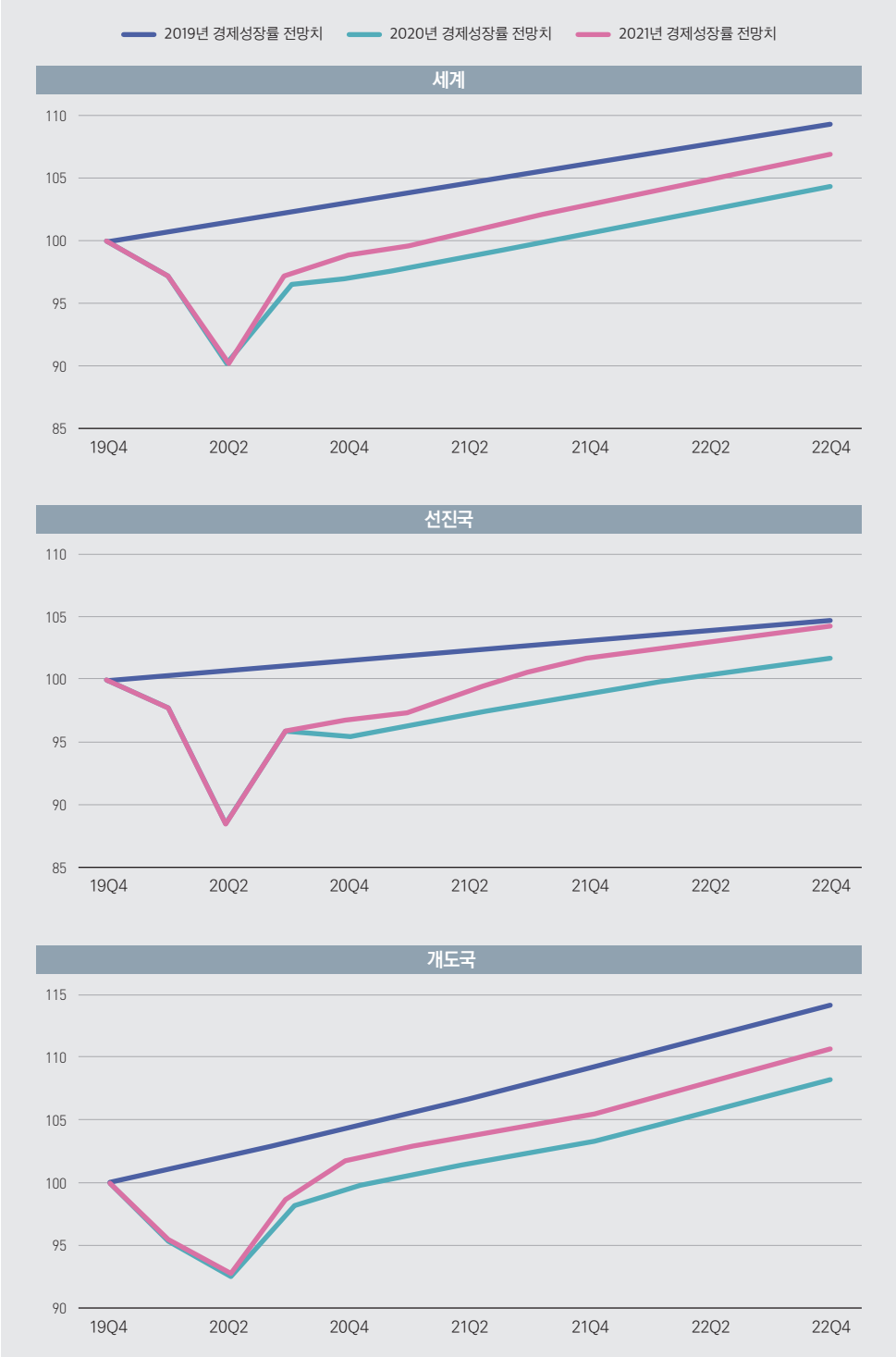
자료: OECD(2021),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p.4)

1 미국의 경우 American Rescue Plan에 따른 대규모 부양책이 시행될 경우 향후 1년(2021.2/4분기~2022.1/4분기)간 미국의 GDP 3~4% 제고, 225~300만 명의 고용 증가, 주요 교역 상대국의 성장 제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2 IMF의 경우 4월 세계 경제전망(WEO)을 통해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6.0%, 2022년은 4.4%로 추정했고,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1년 3.6%, 2022년은 2.8%로 전망했다.

〈그림 2〉 **세계 경제성장 전망**

(단위: 2019Q4=100)



자료: OECD(2021),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p.12)

다음은 △세계 △선진국 △개도국별로 OECD가 전망한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남색 선),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파란색 선),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분홍색 선)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OECD는 특히 백신 보급 속도 및 팬데믹 전개양상에 따라 상하방 시나리오를 별도로 제시했다. 만약, 백신 보급이 가속화되고 경제심리가 회복된다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1년 7.0%, 2022년 5.0%로 기존 전망 대비 각각 1.5%p, 1.0%p 증가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백신 보급 지연과 변종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경제심리가 부진해진다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1년 4.5%, 2022년 2.75%로 기존 전망 대비 각각 1.0%p, 1.25%p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3. 향후 리스크 원자재·유가·국채금리 등이 복병

OECD는 최근 예상보다 빠른 수요 회복과 공급 부족 현상이 가중되면서 식료품·금속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유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발생 조짐이 있다고 언급했다.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은 아직까지 일시적이며 완만한(Mild)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여건이 양호한 편이지만 부문별 리스크 요인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신흥국의 경우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과 통화가치 하락 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가계·기업 부문의 부채비율이 높아, 경기회복 속도가 더디거나 정부지원 정책이 종료될 경우 채무불이행 및 파산 등으로 인한 금융리스크 확산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4. 정책 권고 백신, 재정정책, 구조개혁 집중

OECD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심리 회복, 바이러스 확산 억제, 팬데믹에 따른 장기적 비용 축소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빠른 백신의 생산, 보급,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간 백신 협력 및 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며,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검사·추적·격리(Test-Track-Trace)'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효율적 방역도 언급했다. 둘째,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 기조 변화는 불필요하고 신규 재정지출의 경우 피해계층에 집중(Targeting)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디지털 부문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 향후 경제의 복원력·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데이터 과학자

dBrain운영본부 기술지원부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를 중심에 놓고 새로운 성장문법을 모색하는 전략이다. 본 코너는 데이터와 관련한 신기술, 정부정책, 데이터 댐, 산업동향 등을 전한다. 미국의 뉴딜 정책이 값싼 공공재(Electricity for All)로 만들어 공장·가정에 공급했듯이, 본 코너는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두를 위한 데이터'(Data for All)를 꿈꾼다. 이번 호에서는 데이터에서 금맥을 찾아내는 데이터 과학자에 대해 다뤄본다.

바야흐로 데이터 폭증의 시대다. 컴퓨팅 자원의 지속적인 발달(저렴한 가격, 고성능, 고용량), 통신 속도 향상, IoT 센서 기술의 발전(보급), 모바일 및 SNS 활성화 등은 데이터의 생산 속도를 더욱 가파르게 하고 있다. 하루에 약 25억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산된다고 하니 엄청난 데이터가 매일 축적되는 것이다.

이런 데이터의 폭증은 빅데이터로 이어졌다. '빅데이터'란 용어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낯설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누구에게나 익숙한 단어가 됐다. 빅데이터는 등장할 때부터 꾸준히 주목을 받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많이 축적된 데이터는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많은 고민을 안겨주기도 했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하는데, 그 가치를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다. 데이터가 많아졌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인사이트 발굴이 어려워진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고민의 해결사가 데이터 과학자(사이언티스트)다. 데이터 과학자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방대한 데이터에서 목적에 따른 유익한 정보를 얻어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람을 말한다. 무분별한 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것을 읽어내는 판별력과 분석력으로 무장한 사람들로, 데이터에서 금맥을 찾아내는 사람들이라 불리기도 한다"라고 정의된다. 빅데이터의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가 아닐 수 없다. 데이터 과학자는 〈그림〉과 같이 업무 지식을 보유하고 수학·통계학 능력과 컴퓨터과학 능력을 모두 겸비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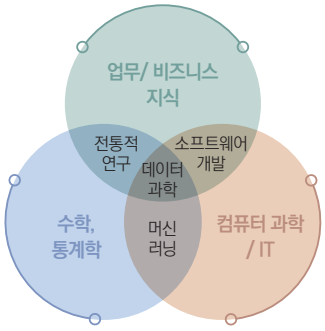
어려운 만큼 연봉과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하다. 미국 최대의 직장평가 웹사이트인 글래스도어가 2020년에 발표한 최고 직업 순위에서 데이터 과학자는 3위에 위치했다. 평가 기준

은 직업 만족도, 구인 중인 일자리, 연봉의 중간값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1위였지만 공급이 늘어 순위가 떨어졌다. 다만 중간 연봉은 107,801달러(약 1억 2,800만원)로 상위 1, 2위 직업보다 높다. 만족도 또한 5점 만점에 4점으로 1, 2위보다 높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프로젝트인 '데이터 댐'의 일환으로 10개(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소비,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2020년 말 기준으로 3,246종의 데이터를 축적·개방했다. 또한 6개(농식품, 디지털산업혁신, 라이프로그, 소방안전, 스마트치안, 해양수산) 분야 신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약 700종의 데이터를 2~3월에 추가 개방했다.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댐의 성과는 또 다른 성과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된 고품질의 데이터가 늘어난다는 것은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발굴할 기회가 늘어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뉴딜을 통한 데이터 댐이 데이터 과학자 양성의 자양분이 되고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본다.

데이터 과학자 필요 역량



구분	필요 역량
컴퓨터 과학/ IT	• 데이터의 수집, 변환, 처리,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 분석된 데이터 결과의 시각화
업무/ 비즈니스 지식	• 보유 데이터의 속성 이해 및 해석 •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발굴해낼 수 있는 통찰력
수학, 통계학	• 단순 분석을 넘어 예측 가능한 수준의 통계학 및 머신러닝에 대한 이해와 지식 • 통계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 및 활용

참고 문헌

- theSCIENCEplus(2020. 8. 14.), '디지털 재앙 약 200년 후 디지털 정보의 양은 지구 전체보다 더 많은 공간 차지', URL: http://thescienceplus.com/news/newsview.php?ncode=1065579012676159
- 네이버 지식백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Data Scientist]'(김환표(2013.8.5.), 「트렌드 지식사전」), URL: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70338&cid=55570&categoryId=55570
- 김대건 연구원(2016.10.25.), 'Data Scientist(데이터 과학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 DNI WEBZINE, 제155호, URL: http://www.dni.co.kr/webzine/2016_10/part04_02.html
- 주간동아(2020.2.22.), 조진표 진로교육 컨설턴트(와이즈멘토 대표), '[좌충우돌 일자리] 연봉 1억 4,00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직업', URL: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222/99824375/1

정부와 학계, 법조계의 오랜 연구와 노력으로 「행정기본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행정기본법」을 통해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일까?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박종구 총괄팀장을 만나 「행정기본법」에 대해 알아보자.

글. **정재림** 일러스트. **강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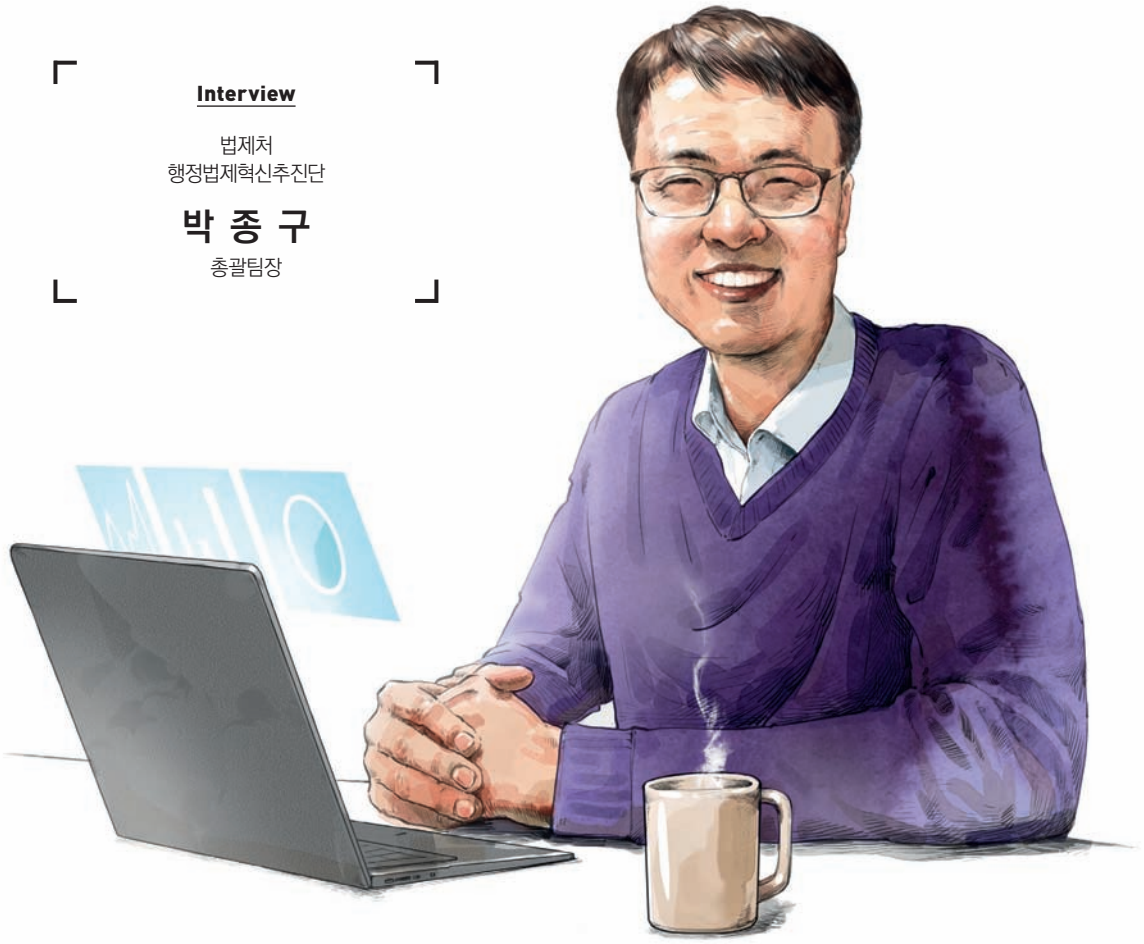
행정법의 공통 매뉴얼 「행정기본법」

Interview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박 종 구

총괄팀장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 인터뷰로 진행하였습니다.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빠른 행정

지난 2019년 9월 법제처에 '행정법제혁신추진단'이 설치됐다.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행정법령 개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법제처 차장이 겸직하는 단장과 부단장, 그리고 2개의 팀(총괄팀, 지원팀)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법률 초안을 마련하고 '행정법제혁신주문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대학교수 및 법조계 등과 꾸준히 소통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행정법제혁신추진단은 「행정기본법」이라는 바퀴가 힘 있게 굴러가도록 하는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종구 총괄팀장은 행정법제혁신추진단을 소개하며 구성원들에 대한 굳은 신뢰를 내비쳤다. 그렇다면 「행정기본법」은 무엇일까? 행정의 원칙과 공통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은 1960년도 중반부터 학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구상되어 왔다. 하지만 학계와 부처의 입장 차이와 판례 부족 등의 이유로 실체적 규정은 제외한 채 절차적 사항을 중심으로 「행정절차법」이 1996년에 제정됐다. 이후 학계·법조계로부터 행정의 실체적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 제정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고, 이에 정부 차원에서는 법제처가 2016년부터 두 차례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법률 제정을 위한 준비가 진행됐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정 후 25년 동안 입법을 뒷받침할 만큼 판례와 학설도 성숙됐다.

"지난 2019년에 대통령께서 국민의 불편을 개선하는 사안마다 수백 개의 개별법을 정비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법제처에 지시하시면서 법 제정 작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약 2년간의 준비와 입법 노력 끝에 지난 2월 '행정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3월 23일자로 공포되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부와 학계, 법조계의 오랜 노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박종구 총괄팀장은 우리나라 공무원이 행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행정법의 공통 매뉴얼'이자 모든 법령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바로 「행정기본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법령 5천여 개 중 4천 6백여 개(90% 이상)가 행정법령에 속하지만, 정작 법 적용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었습니다. 나무의 가지와 잎은 무성한데, 기둥이 되어 줄 줄기가 없었던 셈입니다. 「행정기본법」은 이러한 행정법령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큰 줄기가 되는 법입니다. 즉, 민사 분야에서는 「민법」, 형사 분야에서는 「형법」처럼 행정법 영역에서도 행정법 체계의 골격을 이루는 '기본법'이 이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행정기본법」이 우리 일상에 차질 없이 안착하고, 이를 발판삼아 앞으로 'K-Law'가 세계 표준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행정의 변화

「행정기본법」에는 그동안 학설과 판례에 의존하던 행정의 법 원칙과 기준들이 명문화됐다. 앞으로는 이 법이 공무원에게는 업무수행의 기준이 되는 '직무규범'으로, 국민에게는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규범'으로 기능하게 된다. 또한 개별법에 흩어진 공통의 행정제도들을 이 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해서 행정법 체계가 한결 쉽고 간결해지게 된다. 법제사적(法制史的) 측면에서도 행정 실체규정에 관한 단일 법전이 없는 미국과 일본 등의 여러 법제 선진국에 앞서는 입법 성과다.

「행정기본법」으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형사법에는 범죄행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을 못 하게 하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다. 일부 행정법령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제도가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행정법령에는 인허가 취소와 같은 제재처분의 행사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법 위반 후 수년이 지나 까맣게 있고 있다가 행정청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영업장 폐쇄처분 통지를 받아 사업자가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판례와 이론을 통해 이미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영업장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이것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들이 행정실무에 적용하기를 꺼렸고 그 결과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행사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원칙 규정을 두어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없애고 예측 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의 법적 토대가 강화된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입신고, 영업신고 등 여러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신고서 제출만으로 접수가 끝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내용심사까지 받고 신고증서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같은 신고인데도 통일된 기준이 없어 제각각 운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에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문화했다. 앞으로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규정된 경우 외에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세계로 향하는 「행정기본법」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을 통해 법치행정과 국민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법의 주요 원칙들이 법률에 명문화되었으며, 공무원들은 관행에 의존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법에 따른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로써 국민들은 「행정기본법」에 근거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민이 불편을 느꼈던 규제의 개선도 한결 쉬워진다. 인허가의제나 이행강제금처럼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제도들에 통일적인 기준이 생겼다.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공통 기준들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도 규제 개선이 가능하다.

특히, 「행정기본법」에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이 도입됐다. 지금까지 일부 법률에 도입되어 있던 이의신청제도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처분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행정기본법」에 인공지능(AI)과 같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규정은 미래 과학기술 발전에 행정이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행정기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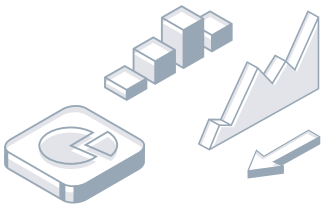
"법 제정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는 '하자 있는 처분의 치유·전환', '영업자의 지위 승계', '제재 처분의 효과 승계' 등 국민 권익 보호나 법 이론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문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듭되는 토론과 법조문을 다듬는 과정에서 빠지긴 했지만, 앞으로 판례가 축적되고 학문적 논의가 성숙된다면 「행정기본법」에 반영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행정기본법」은 학설과 판례로 정립된 사항들을 우선 반영했지만, 학설과 판례의 발전에 따라 보완될 여지를 많이 남겨두었습니다. 앞으로 법치행정과 국민 권익 보호에 필수적인 법 원칙과 행정제도를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이 법을 계속 보완·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박종구 총괄팀장은 「행정기본법」을 통해 행정법의 공통 매뉴얼이 세계 표준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포부도 함께 전했다.

"불행했던 식민 시대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법제(法制)에서도 일본법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아직 행정실체법이 없는 일본을 앞서게 되었습니다. 이 점이 가장 뿌듯한 부분입니다. K-방역의 우수한 성과와 '기생충', '미나리' 등의 K-콘텐츠로 우리나라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도와 콘텐츠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행정기본법」이 우리 일상에 차질 없이 안착하고, 이를 발판삼아 앞으로 'K-Law'가 세계 표준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950년대 원조재정:
자유경제체제와 재정안정

글.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dsoak@naver.com)



한국전쟁으로 남한은 약 210만 명의 인명피해(국군 60만 명, UN군 54만 명, 민간인 100만 명)와 국민총생산 1.7배에 달하는 물적피해를 입었다[1]. 일제의 질곡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근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국민적 열망은 해방 직후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초인플레이션과 경제적 혼란은 계속되었고 오랜 전쟁에도 불구하고 조국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전후 복구라는 절박한 과제만 추가로 안겨졌다. 이제 한국 경제는 해외 원조 없이 연명할 수 없는 세계 최빈국(1953년 1인당 GDP 65달러)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원조재정과 예산편성

미국은 미군정기에 구호 원조를(GARIOA), 정부 수립 직후에는 마셜 플랜에 의한 지원을(ECA & SEC),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에는 UN과 함께 구호 원조(CRIK)와 전후 복구를(UNKRA) 제공했다. 또한 미국은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하자 절약할 수 있게 된 방위기금 2억달러를 한국의 재건과 경제부흥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미국의 원조는(PL480 & AID) 계속 이어졌다[2]. 1945년부터 1961년 말까지 한국이 수령한 전체 원조액은 31억달러였는데, 이는 1965년 대일청구권 무상 제공 3억달러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3].

---

1 부상자를 포함한 인적피해로서 국방군사연구소(1996), 「한국전쟁피해통계집」 참조. 남한의 물적피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물적손실이 GNP의 2.6배였음을 감안하면 높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당시 남한은 농업 중심 사회로서 사회기반시설이 극히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물적피해가 전쟁 발발 3개월 동안 서울·경기와 영남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강동원(2003), "한국전쟁의 물적피해와 그 경제적 영향"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참조).

2 다양한 원조 형태에 대해서는 이해동(1956.10.), "대한원조의 유형," 「국회보」(pp.146-151) 참조.

3 미국의 원조는 1980년대 초반까지도 계속되었다. 연평균 원조금액을 5년 단위로 비교해보면 1961~1965년 1.87억달러, 1966~1970년 0.99억달러, 1971~1975년 0.12억달러 등과 같다. 한국은행(1984), 「경제통계연보」(p.245) 참조.

미국의 원조로 제공된 물자, 용역, 기술 제공은 한미 간의 협정 환율에 따라 원화 상당 금액으로 전환되어 한국은행에 정부 명의의 특별계정으로 적립되었다. 이러한 적립금을 대충자금(Counterpart Fund)이라 하는데, 원조물자를 국내에 매각하여 수령한 대금은 이 특별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리되었다. 정부는 대충자금으로부터 용도별 특별회계(전란수습, 대충자금, 경제부흥 등)를 통해 재정지출로 활용했다[4].

〈표 1〉 **외국원조 수입현황(1949~1961년)**

(단위: 천달러)

연도	미국				UN			원조 수입 총계
	GARIOA	ECA & SEC	PL480 & AID	소계	CRIK	UNKRA	소계	
1949	92,703	23,806	–	116,509	–	–	–	116,509
1950	–	49,330	–	49,330	9,376	–	9,376	58,706
1951	–	31,972	–	31,972	74,448	122	74,570	106,542
1952	–	3,824	–	3,824	155,534	1,969	157,503	161,327
1953	–	232	5,571	5,803	158,787	29,580	188,367	194,170
1954	–	–	82,437	82,437	50,191	21,297	71,488	153,925
1955	–	–	205,815	205,815	8,711	22,181	30,892	236,707
1956	–	–	304,004	304,004	331	22,370	22,701	326,705
1957	–	–	368,789	368,789	–	14,103	14,103	382,892
1958	–	–	313,525	313,525	–	7,747	7,747	321,272
1959	–	–	219,733	219,733	–	2,471	2,471	222,204
1960	–	–	245,150	245,150	–	244	244	245,394
1961	–	–	199,245	199,245	–	–	–	199,245
합계[1)]	502,097	109,164	1,944,269	2,555,530	457,378	122,084	579,462	3,134,992

주 1) 1945~1948년의 GARIOA 원조 409,394천달러 금액이 포함된 합계 금액임
자료: 한국은행(1963), 「경제통계연보」(p.240)

원조대금은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사용되었는데, 1953년 12월 한미 간에는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이 체결되었다. 여기서는 균형재정, 대출제한, 단일환율, 자유기업, 기업의 자기자금 부담, 자유가격제, 원조자금 운용원칙 등이 규정되었는데, 그 기본 방향은 '자유경제체제 개편'과 '물가안정기조 확립'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이 협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협의 과정에서 한미 간에는 한국군 증강과 현대화, 원조물자 일본 조달 등에 대해 외교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다[5].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 체결 전에는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 휴전협정 체결 후에는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압박했던 것이다. 1954년 11월 17일 '한미합의의사록'이 최종 체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단호하고도 치밀한 협상 전략으로 자신의 요구 조건을

4 한국산업은행(1967.6.), "대충자금의 운용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 「산은조사월보」(pp.1-14).
5 이현진(2006), "1950년대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운영과 역할",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pp.385-429) 참조.

상당 부분 관철하며 중국 공산주의와 일본 팽창주의 속에서 한국의 자주적 생존과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는 데 성공했다[6].

원조자금이 가시화되자 1954년 1월 한국 정부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용이성을 위해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를 미국의 회계연도에 맞추어 변경하며 1954년 회계연도를 15개월로(1954.4.1.~1955.6.30.) 연장했다[7]. 그러나 원조자금이 미 의회에서 6월에 통과하더라도 8월경에야 각국에 분배되었고 또 그 사용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9월 중에 이루어졌기에 7월 이전에 예산편성을 확정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일을 1월 1일로 다시 변경함에 따라 1955년 회계연도는 18개월로(1955.7.1.~1956.12.31.) 연장되었고 1956년 회계연도는 폐지되었다.

사실 행정부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55년 말까지 1년 치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제출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8]. 더구나 두 차례의 회계연도 변경 과정에서 '무(無)예산' 상태가 35일간 지속되며 '행정부 헌법위반', '대통령 탄핵 사유' 등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어쩌면 근대적 행정 경험이 전무했던 우리나라가 경제사회적 혼란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통과의례였을지 모른다[9].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로 변경되면서 비로소 행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안정적인 궤도로 진입할 수 있었다[10].

1954년 신국책과 자유경제체제 전환

원조재정 속에서 미국은 한국의 경제체제를 자유경제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제헌헌법 경제조항들은 일제가 구축한 강력한 중앙집중식 경제체제 속에서 국가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는데, 당시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자유경제 이념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거의 모두 국가사회주의체제에 동조하고 있었던 것이다[11]. 반면 미

6 의사록의 공식 명칭은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합의의사록'인데, 이는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효를 위한 기본전제였다. 차상철(2013), "이승만과 한미합의의사록의 체결", 「군사연구」, 135호(pp.39-7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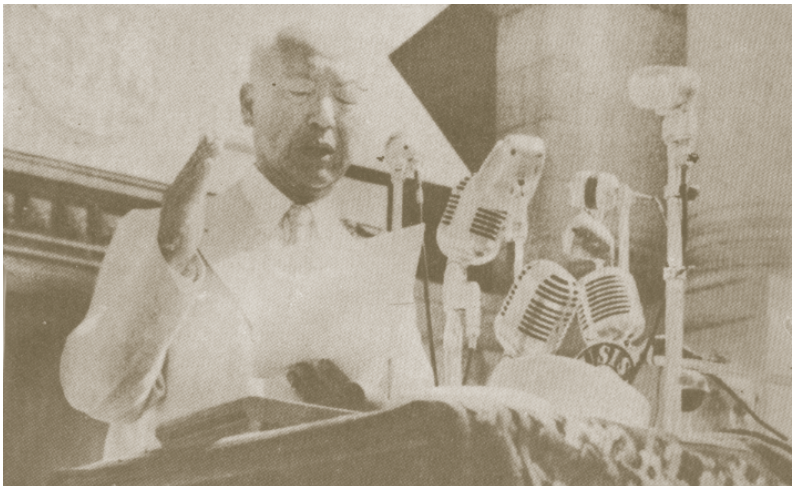
7 기획처(1954), 「단기 4287년도 총예산개요」(p.1) 참조.

8 매번 행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또는 임박하여 예산안을 제출했기에 국회는 1개월의 가예산을 통과시킨 후에 1년치 예산안을 심의하곤 했다. 4·19혁명 직후인 1960년의 헌법개정에서는 '가예산' 대신에 전년도 경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제도가 채택되었다.

9 물론 1954년 말까지 계속된 한미 간의 외교적 갈등으로 원조가 지연된 것이 더 핵심적인 이유일 것이다.

10 정부는 1957년 예산안을 1956년 11월 7일에, 1958년 예산안을 1957년 9월 15일에 국회에 제출했다.

11 제헌헌법은 1941년에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참조했음을 감안한다면 사회주의적 통제경제는 당시의 시대정신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의회에서는 자유기업체제로 전환하지 않는 한 원조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민간자본의 축적이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소유는 불가피하지만 자유경제제도를 촉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2].

사사오입 개헌으로 불리는 1954년 11월의 제2차 헌법 개정에서 「제헌 헌법」의 경제조항이 개정되었다. 첫째, 자연자원의 국유화를 원칙으로 하고 민간에 대한 특허 부여를 예외로 규정한 「제헌 헌법」 제85조를 개정하여, 자연자원의 민간특허를 일반적 원칙으로 규정했다. 둘째, 운수·통신·금융·보험·전기·수리·수도·가스 등 공공성을 갖는 중요 산업의 국유화를 원칙으로 규정한 제87조제1항을 삭제했다. 셋째, 민간기업의 국공유 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제88조를 개정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공유 전환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자유경제체제 전환은 비록 미국에 의해 강제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역사에서 매우 획기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1954년 1월 정부는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직후 5월에 자유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신국책(新國策)'을 공포했다. 여기에는 ① 국영기업체 지정 해제, ② 한국은행으로부터 직접차입이 가능한 정부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③ 귀속기업체의 급속한 불하, ④ 은행과 조폐공사를 제외한 국영기업체들의 민유민영화, ⑤ 국영기업체, 정부관리기업체, 정부대행기관 등에 대한 정부보증융자, 원조물자 특혜배정 폐지 및 행정적 간섭 배제 등 다섯 가지가 포함되었다[13]. 신국책의 실질적인 효과는 귀속기업체의 신속한 민간 불하에 집중되었는데, 민간의 기

12 자유경제로의 체제 전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관련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신용옥(2008), "대한민국 헌법 경제조항 개정안의 정치·경제적 환경과 그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4집(p.278) 참조.

13 "자유경제 이행촉진", 조선일보 1면 기사(1954.4.17.) 참조.

업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자유경제체제의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귀속기업체란 해방 이후 미군정이 일본으로부터 몰수하여 한국 정부에 이관한 기업들인데[14], 당시 귀속기업체를 포함한 귀속재산은 남한 국부(國富)의 80%에 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15]. 남한 경지의 12.3%에 달했던 귀속농지는 미군정의 농지개혁으로 대부분 매각되었고, 귀속기업체와 기타 재산(상점, 음식점, 여관 등) 대부분은 1948년에 한국정부에 인계되었다. 정부는 1950년에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매각을 진행했는데, 한국전쟁 기간 중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귀속재산 매각을 서둘렀으며 특히 1954년 신국책 이후 집중적으로 매각했던 것이다[16].

재정안정과 일반재정

1954년부터 원조대금이 정부재정으로 흘러들어오면서 한국은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1955년 이후 원조대금의 세입 내 비중은 절반에 달하면서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미합동경제위원회는 1957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정안정계획'을 수립하며 재정, 통화, 금융정책의 총량적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강력한 재정긴축을 위한 '재정안정계획'이 매년 수립됨으로써 재정안정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표 2〉는 정부수립 이후 1961년까지의 '일반재정' 결산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1950년대 후반에 들어와 정부는 '일반재정'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지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일반재정'은 조세와 원조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운용의 범위로서 일반회계, 대충자금특별회계, 경제부흥특별회계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재정'에서 제외되는 특별회계들은 귀속재산처리, 전매사업, 양곡관리, 농지개혁사업, 교통사업, 통신사업,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데, 이들은 독립채산적 성격이 강한 정부사업들을 계리했다.
재정수지는 '일반재정'의 세입총액과 세출총액의 차이로 파악되었는데, 세입에는 국채수입이 포함되지만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되었다. 이러한 재정수지 개념에서 볼 때 1955~1960년까지는 재정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당시에는 조세부담과 전매익금(전매사업의 이익)의 합계로서 '총재정부담'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는 전매사업 이익이 공공요금으로 연결되기에 국민부담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14 미군정의 일본인 재산몰수는 국제법상으로 상당한 딜레마가 있었는데 관련 내용은 배석만(2014.6.), "해방 후 귀속재산 처리의 전개 과정과 귀결", 「한일민족문제연구」, 제26호(pp.43-91) 참조.
15 해방 후 한반도 전체에서 일본 소유의 자산은 약 53억달러(북한 30억달러, 남한 23억달러)로 추정되었는데, 한반도 전체의 국부 통계가 없어 그 비중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당시 국무총리와 관재청은 80%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신용옥(2008), "미군정·이승만 정권기 국가자본으로서 귀속재산의 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참조.
16 귀속재산 매각대금으로 토지개혁의 지가증권들이 많이 사용됨으로써 정부의 재정수입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재정 중심의 재정안정 노력은 1960년대에 들어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1957년부터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무상 원조에서 개발차관으로 전환하면서 적자재정을 통한 자립적 경제개발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58년 4월에는 부흥부 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산업개발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1959년 12월에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수립 확정했다. 이 계획은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60년 8월에 집권한 장면 총리도 11월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입안을 공식 지시했는데, 이 또한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발표되지 못한 채 사장되었다[17]. (다음 호에 계속)

〈표 2〉 **일반재정의 결산**[1)]

(단위: 백만환 – 1953~1962년 화폐단위)

연도 (결산)	세출			세입			재정수지 (= B – A)	차입금	총재정 부담 /GNP[2)]
	군사비	부흥비 (외국원조)	합 계(A)	조세	외국원조	합 계(B)			
1949	239.5 (26.3)	–	911.1 (100.0)	135.5 (14.9)	2.2 (0.2)	460.3 (100.0)	△450.8	451.3	–
1950	1,324.3 (54.5)	–	2,429.6 (100.0)	427.2 (17.2)	131.5 (5.3)	959.6 (100.0)	△1,470.0	1,525.7	–
1951	3,298,4 (53.4)	–	6,178.6 (100.0)	3,924.3 (60.1)	0.0 (0.0)	6,525.4 (100.0)	346.8	0.0	–
1952	9,462,8 (44.0)	–	21,507.6 (100.0)	9,660.0 (43.7)	3,069.5 (13.9)	22,118.0 (100.0)	610.4	0.0	–
1953	32,605.4 (53.7)	–	60,683.1 (100.0)	20,566.0 (30.8)	7,958.9 (11.9)	46,628.4 (100.0)	△14,054.7	20,200.0	6.1
1954	59,918.1 (42.1)	20,749.7 (14.6)	142,391.6 (100.0)	51,430.6 (34.5)	44,704.3 (30.0)	125,996.4 (100.0)	△16,395.2	23,200.0	7.3
1955	106,378.8 (37.8)	58,960.7 (20.9)	281,439.4 (100.0)	109,380.7 (33.8)	150,536.3 (46.5)	323,775.8 (100.0)	42,336.4	0.0	8.3
1956	회계연도 존재하지 않음								
1957	112,461,6 (32.1)	106,969.9 (30.6)	350,034.3 (100.0)	115,897.9 (27.3)	224,510.5 (52.9)	415,088,8 (100.0)	65,054.5	9,500.0	9.0
1958	127,323,4 (31.0)	132,957.0 (32.4)	410,969.6 (100.0)	143,486.9 (30.1)	245,800.5 (51.5)	454,805.5 (100.0)	43,835.9	22,300.0	10.6
1959	139,198.1 (34.8)	90,784.6 (22.7)	400,223.7 (100.0)	215,975.7 (47.4)	189,100.4 (41.5)	448,995.4 (100.0)	48,771.7	6,400.0	14.1
1960	147,066.8 (35.0)	68,358.4 (16.3)	419,954.5 (100.0)	249,713.2 (51.5)	167,626.6 (34.6)	476,556.5 (100.0)	56,602.0	8,007.2	14.0
1961	168,110.9 (27.4)	90,710.9 (14.8)	614,229.3 (100.0)	186,171.3 (30.3)	310,470.7 (50.5)	608,229.3 (100.0)	△6,000.0	6,000.0	10.1

주 1) 1961년은 예산상의 수치이며, 표의 ( )안 수치는 합계금액 대비 비중(%)임
2) (조세부담 + 전매익금) ÷ 국민총생산(GNP)
자료: 경제기획원(1962.12.31.), 「1962년도 예산개요」(pp.100-101)

17 강광하·이영훈·최상오(2008), 한국개발연구원, 「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체계: 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p.51, p.74).

Andy Warhol, 〈Marylin Diptych〉, 1962,
Acrylic paint on Canvas, 205.44×289.56cm,
Tate Gallery, London

앤디 워홀과 그림의 대량생산

글. **최병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경제학자의 미술관』 저자

현대자본주의 사회가 물질적 풍요로움을 구가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생산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의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량생산으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가능하게 되면서 생산의 한계비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예술의 경우 이 같은 경제적 효율성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림의 생산 과정을 보자. 똑같은 그림을 한 점 더 그린다고 할 때, 처음에 그림을 구상하는 단계를 제외한다면 추가적으로 같은 그림을 그리는 데 들어가는 투입물(화가의 노동력, 물감의 양, 캔버스의 크기 등)의 규모는 동일할 것이다. 그림의 생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재생산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의 투입을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이를 통해서 상업적 수익을 얻은 화가가 있다. 미술사에서 먼저 꼽을 사람은 루카스 크라나흐(Lucas Cranach, 1472~1553년)이다. 크라나흐는 독일 작센의 궁정화가였다. 그는 독특한 관능미를 지닌 비너스 〈루크레티아(Lucretia)〉를 그렸다. 크라나흐가 그렸던 여러 비너스 작품 가운데에는 작품성이 떨어지는 것들도 꽤 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공방에서 그림을 제작했기 때문이다. 그의 작업실은 공동 작업을 위한 가내수공업장과 같은 공방이었다. 이러한 공동 작업과 제자들과의 분업을 통해서 대량생산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크라나흐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상업적으로 그림을 대량생산한 화가를 찾아보면 단연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년)을 꼽을 수 있겠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의 팝아

트는 가벼운 대중예술의 이미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장르로 자리 잡았는데, 1950년대 이후에 등장한 수많은 팝아트 작가 가운데 20세기 후반의 가장 중요한 작가로 꼽히는 인물은 바로 앤디 워홀이다.

워홀은 1928년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했으며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1952년경부터 뉴욕에서 광고물 제작 일에 뛰어들었다. 그는 대중잡지에 삽화를 그리며 상업 디자이너로 활약했다. 그 후 그는 가수나 영화배우 같은 유명인들, 예를 들어 마릴린 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리고 재클린 케네디 등을 작품의 소재로 삼았고, 그들의 대중적 이미지를 판화기법 가운데 하나인 캔버스 위에 반복하는 즉,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제작했다. 실크스크린은 보통 광고 전단 등을 제작하는 인쇄 기법으로 순수미술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상업미술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워홀의 많은 그림들에서는 이미지들이 기계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상업적인 인쇄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실크스크린 공장을 세운 뒤 조수를 두고 작업지시서를 통해 작품을 대량으로 찍어냈다. 그는 마치 대량생산을 위한 공장에서 획일화된 제품을 생산하듯 예술작품을 만들어냈다. 그는 생산해낸 작품에 사인을 해서 판매하며, 예술은 비즈니스라고 공공연하게 표명했다. 워홀은 자신이 말했듯 최초의 '상업예술가'였다. 그는 상품 생산을 하는 비즈니스맨처럼 작품을 만들었고 실제로 그의 작품을 비즈니스 아트라고 불렀다. 상업예술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그는 돈을 버는 예술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한 자본주의 예술가였다. 이런 점에서 워홀이 차지하는 미술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중적 이미지의 기계적인 재생산이라는 점에서 워홀의 작품은 표피적이고 무감각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대량소비사회에 대한 비판도 담겨 있다. 워홀은 자신이 즐겨 먹던 수프 깡통, 만화 한 컷, 신문 보도사진의 한 장면, 영화배우의 브로마이드 등 매스미디어의 매체를 캔버스에 전사, 확대하는 수법으로 당시의 대량소비문화를 찬미하는 동시에 비판한 것이다. 또한 워홀은 처음부터 팔릴 만한 작품을 제작했다. 이미 수요가 많고 잘 알려진 대중문화를 활용한 작품보다 더 잘 팔릴 것이 어디 있겠는가?

워홀이 이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까지에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제대국의 힘이 작용했을 것이다. 미국이라는 신흥 대국은 당시에 유럽에 비해서 문화의 부재 혹은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미국의 문화적 콤플렉스는 자국의 새로운 문화의 뿌리를 가지고 싶었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대중적 소비를 위해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팝아트의 시초가 아니었을까? 그것은 또한 미국의 대량생산적 자본주의의 맥락과 맞닿아있다. 이 같은 팝아트야말로 가장 미국적인 것이며 미국적인 '문화 만들기'의 소산이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

후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된 미국은 문화적인 불모지에서도 문화가 꽃피우기를 바랐던 터에 앤디 워홀의 작품들이 미국의 문화정책에 딱 알맞은 소재가 되었다.

워홀의 작품 중에 최고가를 기록한 작품은 마릴린 먼로의 초상화 중에 〈청록색 마릴린(Turquoise Marilyn)〉으로 알려진 작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미술시장이 활기를 띠었던 2007년 예술품 수집광이자 헤지펀드계의 거물인 스티븐 코언이 8천만달러에 구입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고 미술시장도 침체되었으나 2011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앤디 워홀의 첫 자화상이 그의 자화상으로는 사상 최고가인 3,844만달러에 팔리기도 했다.

그의 작품 중 특히 2면화로 제작된 〈마릴린 먼로 제단화(Marylin Diptych)〉를 보면 앤디 워홀의 대중문화에 대한 역설적인 상징을 읽을 수 있다. 원래 2면화 혹은 3면화는 중세 때부터 제단화의 일반적인 형식으로 사용되던 것이다. 마릴린 먼로는 1962년 의문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는데 워홀은 의도적으로 그 해에 성상(Icon)을 제작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마릴린 먼로의 두 폭 초상화를 제작한 것이다. 왼편은 그녀의 삶을, 오른편을 죽음을 뜻한다. 워홀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희미해지도록 하여 그녀의 죽음을 표현했다. 그가 이 제단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마릴린 먼로라는 대중적 스타는 현대의 성인(聖人) 반열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는 그만의 역설적 주장이었는지도 모른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선도한

루드비히 폰 미제스

글.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현재 자유주의연구회 회장

Ludwig Von Mises

루드비히 폰 미제스 **1881~1973**

자본주의 승리, 당신이 옳았소!

20세기 초 유럽사회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금지하는 사회주의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지배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러시아를 부러움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 무렵에 사회주의 사회에는 가격이 존재할 수 없었다. 경제계획 당국은 생산수단의 다양한 조합들 가운데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계산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등장한 인물이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 1881~1973년)였다. 사회주의자들은 가격이 없어도 경제계획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게 유명한 '사회주의 경제계산 논쟁'이다.

사회주의 사회에는 가격이 존재할 수 없었다. 경제계획 당국은 생산수단의 다양한 조합들 가운데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계산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등장한 인물이 루드비히 폰 미제스였다.

이 논쟁은 나중에 하이에크가 가담하여 미제스를 지원했지만(월간 나라재정 2020년 12월호) 그에게는 외로운 싸움이었다. 미제스의 사회주의 불가능 정리를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다. 슘페터는 순수한 논리로 보면 사회주의는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새뮤얼슨은 1989년 동유럽 사회주의가 무너지기 몇 개월 전까지도 소련과 같은 명령경제도 번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폭삭 망했다. 미제스의 말이 적중했다. 좌파경제학을 이끌었던 로버트 하일브론너는 "자본주의의 승리, 당신이 옳았소!"라고 고이 잠든 미제스에게 말했다.

시장경제의 독점문제도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선도한 미제스의 자유시장 비전도 흥미롭다. 시장경제는 적시에 분업적 경제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유인을 산출한다. 시장사회가 자유와 문명의 조건인 이유에서다. 그것은 소비자 중심 사회라는 점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생산의 최종 목적은 소비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기업이 돈을 번 것

은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봉사했다는 증거다. 동네 빵집을 어렵게 만든 것은 대기업에 속한 빵집이 아니라 이 후자의 빵집을 찾는 소비자다.

시장경제의 소비자 중심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부르게 되는데, 그 결과는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 보호를 특징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도 소비자 중심원리와 저촉되어 위험하다.

미제스는 국가의 특혜나 인허가 등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법적 장애물이 없다면 잠재적 경쟁자가 항상 존재하기에 '독점'을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시장경제는 경제력 남용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기업을 규제하면 이는 경쟁보호가 아니라 경쟁적인 기업 활동의 발목만을 잡는 경쟁제한을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미제스의 이런 주장은 신경제사가들이 미국의 독점금지 정책사의 분석을 통하여 입증했다. 미국은 1890년 셔먼의 독점금지법과 그 이후 다양한 입법으로 시장경제에 개입했지만 싼 값으로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는 경쟁적인 기업의 활동만을 억제하는 우(愚)를 범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1929년 세계대공황이 자본주의 탓이라고?

미제스 사상은 통화이론, 자본론, 이자이론을 개발하고 이들을 통합하여 개척한 경기변동이론에서 빛이 나고 있다. 그 핵심 내용은 경기변동이 순전히 화폐적 현상이고 이는 통화·신용팽창으로 시장이자율이 낮아져 투자가들에게 잘못된 투자를 유도하여 당장은 호황이지만 필연적으로 불황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과 통화를 늘릴 경우, 이는 정상회복을 방해할 뿐이라고 한다. 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장기불황을 설명해주는 미제스의 지혜이다.

미제스의 경기변동이론은 1929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잘 설명한다. 케인스가 믿는 것처럼 유효수요의 부족이나 마르크스주의가 희망한 것처럼 자본주의 위기의 탓이 아니었다. 밀턴 프

미제스의 사상은 사회주의, 케인스주의, 복지국가 등의 집단주의가 시대정신이 되었던 시기의 산물이다. 그가 통렬하게 비판했던 대로 사회주의는 결국 망하고 말았다.

리드먼처럼 단순이 돈줄을 줄인 탓도 아니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통화를 증대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붐이 불가피하게 터진 결과였다. 그 불경기가 전대미문의 대공황으로 이어진 것은 소득세 인상, 보호무역 그리고 각종 규제 때문이었다.

미제스 사상의 힘

미제스의 사상은 사회주의, 케인스주의, 복지국가 등의 집단주의가 시대정신이 되었던 시기의 산물이다. 그가 통렬하게 비판했던 대로 사회주의는 결국 망하고 말았다. 그의 사상이 견고했음을 말해주는 사건이다. 그는 시장에 대한 간섭은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로 또 다른 규제와 간섭을 불러오는 등, 간섭주의도 결국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제3의 길 같은 중도(中道)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의 주장이 옳다는 것은 스웨덴과 독일의 복지국가 실패가 입증한다.

미제스는 시류에 영합하지 않았다.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그에게 타협과 양보란 없었다. 오늘날 자유주의 이념이 살아있는

것은 그의 불굴의 투지 때문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는 21세기에 다시 인정받고 있다. 미국과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는 그의 이름을 붙인 연구소가 10여 개나 된다는 사실이 그를 입증한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무릅쓰고라도 돈을 풀어야 한다는 압도적인 주장과 환경문제, 주택과 건강, 교육 문제에서 사회주의와 간섭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시류에 영합하는 중도가 아니라 미제스와 같은 원칙의 자유주의가 더욱 더 필요하다. 2008년 금융위기와 설상가상을 덮친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국가주의 버릇이 되살아났다. 이런 상황에서 큰 힘이 되는 것이 미제스가 개척한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사상이다.

위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Financial *Calendar*

January 01

재정
- 2022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경제
- 통계청 2020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 한국은행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IMF 수정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February 02

재정
- 2020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2020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경제
- 통계청 202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 발표

March 03

재정
- 2022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각 중앙관서)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경제
- 한국은행 2020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July 07

August 08

재정
- 2022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경제
-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 통계청 2021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September 09

재정
- 2022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1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 2020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한국은행, 3.4.)

- 2020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2% 성장,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1.4% 성장했으며, 2020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1.0% 감소,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747.3만원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OECD, 3.9.)

- OECD는 백신 접종 확대, 일부 국가의 추가 재정 부양책 등으로 주요국 중심의 성장세 확대를 예상하며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5.6%(2020년 12월 전망 대비 +1.4%p)로 전망. 한국의 경우, 2021년 성장률을 3.3%(2020년 12월 전망 대비 +0.5%p)로 전망하며 주요 국가 중에서 최상위 수준으로 금년 중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정부, 3.25.)

- 정부는 ①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②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③ 긴급 고용대책지원 ④ 방역대책 등을 목적으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총 14.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마련

□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기획재정부, 3.30.)

- 경제활력·미래혁신·민생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이라는 기본방향에 따라 ①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② 미래 혁신 투자 ③ 민생·포용기반 구축 ④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이라는 4대 투자 중점을 설정. 지침은 3월 말까지 부처에 통보되었고,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April 04

재정
- 2020년 결산검사 의뢰 (기획재정부→감사원)

국제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May 05

재정
- 2022년 예산요구서 제출(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2020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20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2021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경제
- 통계청 2020년 가계동향조사(지출 부문) 결과 발표
- 통계청 2021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June 06

경제
- 한국은행 2021년 1/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기획재정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 발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IMF 수정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October 10

국제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November 11

경제
- 통계청 2021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 발표

December 12

재정
- 2022년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 2022년 예산 확정

경제
- 기획재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2021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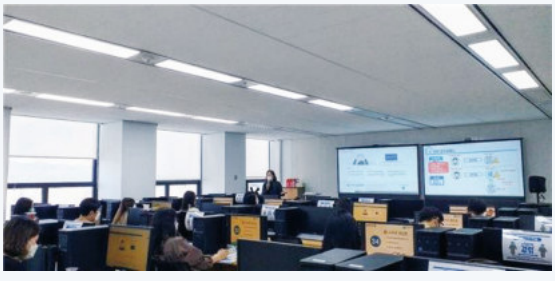
한국재정정보원,
2021년도 신규직원 임명장 수여식

한국재정정보원은 3월 23일(화) 2021년도 신규직원에게 임명장 수여식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함께하지 못하는 임직원을 위해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중계했다. 올해 상반기 채용은 1월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약 3개월 동안 서류심사, 필기시험, 1~2차 면접 등 NCS 기반의 엄격한 블라인드 채용 과정을 거쳤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채용 단계별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을 통해 신규직원 총 44명을 채용했다.

02

한국재정정보원,
광주지역사무소, 광주광역시 남구청을 대상으로
e나라도움 맞춤형 교육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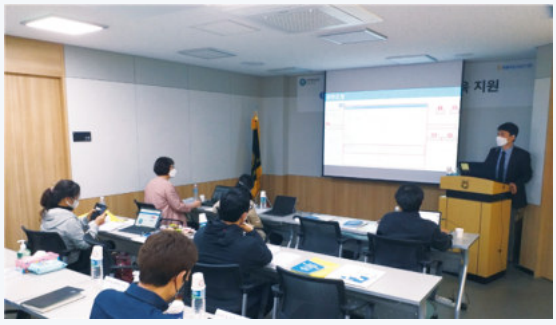
한국재정정보원은 3월 26일(금)과 4월 2일(금) 두 차례 광주광역시 남구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 맞춤형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보원이 광주 남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e나라도움 지자체 맞춤형 교육' 제공을 제안하여 시행됐으며, 향후에도 광주 남구청 공무원들의 e나라도움 사용과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들의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업무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03

한국재정정보원,
eNara 도움뱅크(NH농협은행)를 통한
eNara도움 맞춤형 지원 시행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정보원)은 4월 6일(화) (사)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 취업준비센터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 맞춤형 지원'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보원이 IT 및 정보취약계층 보조사업자 지원을 위해 작년 12월 10일 4개 은행(NH농협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구축한 'e나라 도움뱅크' 플랫폼을 통해 NH농협은행 가평군지부에서 시행되었으며, 향후에도 정보원의 3개 지역사무소(대전, 광주, 대구)와 'e나라 도움뱅크'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 교육 및 업무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원 김재훈 원장은 "이번 NH농협은행 e나라 도움뱅크를 통한 맞춤지원을 시작으로 전국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원에서는 산간·격오지 주민, 소상공인 등 정보 취약계층 보조사업자를 위한 '보조사업자 e나라도움 맞춤형 교육 및 업무지원'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재정시스템(FMIS)을 더 똑똑하게 하고
시스템에 축적된 재정정보를 반듯하게 분석함으로써

‘함께 가고, 오래 가는 재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재정정보원이 수행한 연구분석 보고서 주제들은 △재정시스템 개선 △재정통계 정비 △재정정보 연계 △재정집행 특성 등에 관한 것들입니다. 성과관리 개선 등 일부는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고, 일부는 시스템 개선이나 통계정비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유일한 대중 상대 재정월간지인 『나라재정』은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나라살림 현황, 국내외 재정전망 등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확장재정 과정에서 분출된 여러 재정담론을 소개하는 공론의 장 역할도 일부 수행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려운 재정통계를 쉽게 가공한 △통계집 △해설서 △시각물 등도 제작·배포했습니다. 특히 1,5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국가결산보고서를 14쪽으로 요약하고 웹툰으로 만들어, ‘읽히는 결산서’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소개된 △보고서·통계집 배포 △내용 설명 요구 △월간지 무료구독 △시각물의 활용 등 모든 문의를 환영합니다.

2020년 주요 연구·분석 보고서

01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02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와 경기조정
03 dBrain 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 방안
04 중앙과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활용한 정부 기능별 통계 산출방안
05 「데이터기반행정법」시대, 재정통계 연계·활용을 위한 제언
06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07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 연구
08 재정사업 시계열자료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분석

애독자 코너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재정〉 사진인증 이벤트

월간 〈나라재정〉 책자를 즐겁게 읽으셨다면
책자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사진과 함께 간단한 느낀 점을 적어 보내주신
분들을 선정하여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사진인증 및 독자편지 보내주실 곳

이메일 narajaejung@kpfis.or.kr
응모 기간 2021. 4. 19 ~ 5. 7.

지난 호 이벤트 당첨자

you*****@naver.com
est**********@gmail.com
yel*********@nate.com
nay*********@gmail.com
cha***@naver.com
woo******@yahoo.co.kr

독자편지

안녕하세요.
신문에서 나랏빚에 대한 기사를 읽고 흥미를 느껴 자료를 찾던 중 〈나라재정〉이라는 잡지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 가계부를 작성하기에 나라 운영도 큰 틀에서 보면 차이가 없겠지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부채비율이 가정경제와는 다르게 허용 폭이 커서 흥미로웠습니다. 〈나라재정〉에서 알려준 「열린재정」 홈페이지에서 국가채무 추이를 보고 GDP 대비 채무비율이 얼마만큼 증가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재정 잡지를 꾸준히 읽으면 똑똑해질 것 같고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능력도 키워질 것 같습니다.

You*****

월간 〈나라재정〉은 개인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narajaejung@kpfis.or.kr로 메일 주세요.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의 밝은 내일을 위해
재정정보화를 이끌어갑니다.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ISSN 2508-8971